

INSS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목차

## 북한정세

### 2023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5

---

- |                  |    |
|------------------|----|
| 1. 2023년 북한정세 평가 | 7  |
| 2. 2024년 북한정세 전망 | 21 |

## 국제정세

### 2023년 국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29

---

- |                      |    |
|----------------------|----|
| I. 국제 및 안보 정세 개관     | 31 |
| 1. 국제안보환경 및 한반도 주변정세 | 31 |
| 2. 국제군사안보 정세         | 35 |
| 3. 국제경제안보 정세         | 40 |
| II. 국제정세 평가 및 전망     | 43 |
| 1. 미국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43 |
| 2. 일본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48 |
| 3. 중국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52 |
| 4. 러시아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56 |
| 5. 유럽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60 |
| III. 정책시사점 및 고려사항    | 63 |

## 2023년 신안보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67

---

I. 생성형 AI 리스크의 부상과 확산, AI 위협의 현실화	69
1. 2023년 평가	69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71
II. 사이버공간의 진영화와 협력 기반 사이버안보 강화	73
1. 2023년 평가	73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75
III. 기후재난 지속 속 대응과 회복력 강화 부심	77
1. 2023년 평가	77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78
IV. 적극적 우주력 강화에 따른 우주 공간 대상 경쟁 심화	81
1. 2023년 평가	81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82
V. 테러 외연의 확장과 중동궤 테러위협 확산 가능	85
1. 2023년 평가	85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87
VI. 사이버범죄의 급증과 국제마약시장의 지속 팽창	89
1. 2023년 평가	89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91



# 2023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2023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1. 2023년 북한정세 평가

### 가. 2023년 총평

대내 : 내부 결속 추구했으나 경제난 가중, 취약성 증가로 내구력 약화  
대외 : '신냉전' 정세에 편승,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노력

### 나. 올해 북한의 정세 인식과 체제 유지

#### □ 대내 : 내부 결속 및 동원력 유지에 총력전

- 북한은 올해를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해로 강조, 체제선전과 내부 결속에 집중
  -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 정권수립 75주년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라고 강조
  - 2020년 이후 삼중고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상화를 위해 한 해 열병식 3회(최다 기록) 등 대규모 정치행사 개최
- 경제난과 민생고에 따른 내부 어려움을 위기로 인식,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 3년차 과제 수행과 강제 동원 강화 등 내구력 유지에 총력전
  -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업생산 중심의 '12개 중요고지'<sup>1)</sup>를 제시하고 주민들의 애국심을 강요

1)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12개 중요고지'로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 금속 △질소비료 △세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량을 제시했으며, 이 중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 계획 수행을 선두 과제로 내세웠음. 『민주조선』, 2023년 1월 31일.

- 인민군과 청년동맹 등 핵심 역량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조치 강구
- 김정은의 애민정치 선전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등 민생고 외면
  - 식량난과 민생고로 △아사자 발생 △자살자·강력범죄 증가 등 이완 현상 증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환경
  - △체제선전(김정은 우상화 중심) △핵·미사일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반한·반미 기조로 일관

## □ 대외 : ‘신냉전 정세’ 편승 및 중러북 3국 연대 추구

- 김정은의 ‘신냉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반미’ 중심의 공세적 대응 및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 지속
  - 당 전원회의 보고<sup>2)</sup> 등을 통해 ‘신냉전’과 다극화로 가속화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강구
  - 국제정세 변화를 北 체제 고유의 이념에 경도된 ‘반미/사회주의’ 대결 논리로 확대 해석, 핵무력 강화 중심의 통치 정당화에 활용
- 올해를 중북러 연대 강화에 유리한 환경이자 호기로 판단
  - 정전협정 70주년과 정권수립 75주년을 중북·러북 연대 강화를 위한 대내외 이벤트로 기획,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
  - 김정은이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외교활동을 재개, 방러 및 러북 정상 회담을 경제난 해결과 국방력 강화 돌파구로 활용

---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보고에서는 “...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었다.” 『로동신문』, 2023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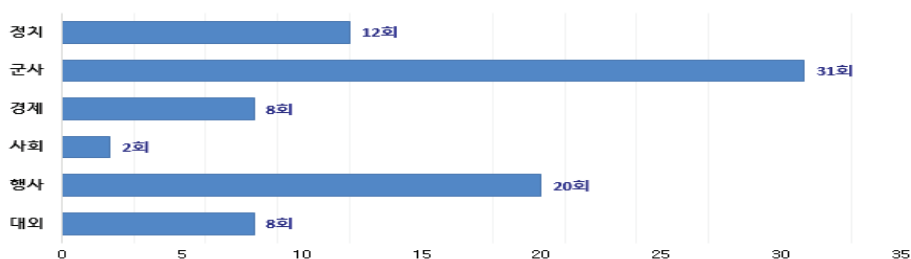
## 다. 부문별 행보 특징 및 평가

### 【 대내 】

#### □ 김정은 리더십/정치

- 어려운 대내외 환경 下 김정은은 리더십의 중점을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두고 내부 결속과 경제적 동원력 유지에 역량을 집중
  - 올해 9월 말까지 공개 활동 추이는 2020년 코로나 19 이후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치·군사 등 부문별 편중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
  - △군사(군수) △행사 △정치(당·정 회의체) △대외 부문을 우선하되, △경제·산업 △사회 부문은 주로 동원력 조치와 전시성 행사로 대체

[2023년 부문별 활동 현황]



※ ‘군사부문’(31회/38%) 지도는 대부분 핵무력 중심의 군수산업에 집중, ‘행사’는 열병식 등 체제선전, ‘경제·산업’은 건설 역점과제에 치중

- 직면한 경제난 해결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당적·군사적 조치 강구, 각급 회의체 가동 등 주로 정책지도 방식을 유지
  - 당정책 결정을 △경제건설(5개년 계획 중심) △농업생산(식량난 해소) △군사정책(핵능력 고도화/경제건설)에 집중하며 내구력 유지에 총력
  - 당 기구별 운용은 △전원회의(경제정책/정세 대응) △정치국회의(통치보장 중심) △군사위원회(경제과제/군사력 강화) 등 경제 → 군사·군수 과업 순으로 주로 상반기에 집중, 하반기는 정치행사 위주

[2021~2023년 당·정 지도기구 일정 비교 (2023년 12월 20일 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분류	횟수	분류	횟수	분류	구분
당	전원회의	4회	전원회의	2회	전원회의	2회(11월)
	정치국회의	5회	정치국회의	13회(협의회) <sup>3)</sup>	정치국회의	4회
	군사위원회	2회	군사위원회	1회	군사위원회	4회
	비서국회의	1회	비서국회의	2회	비서국회의	-
정	최고인민회의	2회	최고인민회의	2회	최고인민회의	2회
계	14회		20회		12회	

-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무력정책을 헌법화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지위와 그 불변성을 명문화
-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김정은 우상화 중심의 각종 정치행사 증가
  - 대규모 열병식(3회)과 기념보고회(정주년 창립절 등), 각급 경축행사 등도 예년에 비해 증가, 행사보장을 위한 외화 등 재원 소비 급증
  - 특히 김정은 집권 10년대를 계기로 올해 김가 일가의 △사적비 △모자이크 벽화 △사적관 등 각종 우상화 건축물 조성도 증대
- 헌법·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 규제 강화
  -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으로 ‘국가 핵무력정책’의 헌법화 실현
    - ※ 2023년 개정 헌법(58~59조) △책임적 핵보유국 △핵무기 발전 고도화 △영토완정 △평화·번영 등 ‘핵·무력통일’ 의미 추가/ ‘자유’ 용어 삭제
  -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수정·보충, 주로 형식적인 절차에서 ‘국가주권 과시’를 위한 방식·내용 등 개정

3) 2022년도 정치국회의(13회)는 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했다.

▣ **총평 : 김정은 체제 강화 (전체주의/집단주의 확대, 당적 지배력 강화)**

➡ **국가성 선전 :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 (선거/절차) ▲후보자 복수 추천 ▲선거자회의 구성(최고, 도, 시, 군)
- (선거/방식) ▲투표함 2개(찬/반) ▲후보자 선전(유권자 상봉모임/당정책 선전)

\* 찬반 투표함 ( **찬성/블루, 반대/레드** )

- (선거/결과) ▲기권자 비율 ▲찬반 비율 ▲ ‘당선’ 용어(이전/선거)
- (관전 포인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과정(2024.3월 예정)

- 정치·사회, 경제 등 부문별 법제도 정비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상징법 △국가기밀보호법·이동통신법 △농장법·노동보수법 △인민보건법·의료법 △관광법 △국가표창법 등 수정·보충 및 △미사일공업절 제정)
- 종합적으로, 올해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치 부문은 경제난·민생고와 별개로 한층 더 강화된 ‘우상화 중심의 체제선전’과 핵능력 고도화에 치중하며 체제유지를 우선시

□ **군사**

- 첫째, 북한은 미·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이용하여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시험발사 및 정찰위성 개발 등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
-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러의 거부에 힘입어 신형 고체연료 기반의 ICBM 화성-18형 시험(4.24.) 등 5차례의 ICBM 발사와 26회에 달하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
-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위해 정찰위성 개발 지속, 올해 2차례의 위성 발사 실패 이후 3차 발사(11.21.)에서 러시아의 기술지원 하에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
- 둘째, 전술핵 공격수단의 개발과 전면전 가상훈련의 실시, 한미연합훈련 및 핵확장 억제 대응을 빌미로 대남 전술핵 위협 증대에 주력

-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3.27.), 무인 수중공격정, 전략 순항미사일 등 8종의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의 시험을 통해 수중·지상·공중에서 대남 전술핵 위협을 현실화<sup>4)</sup>
- 특히 신형 고고도 무인정찰기 셋별-4형과 신형 무인공격기 셋별-9형 등을 개발하고 전술핵과 재래식 공격 전력을 결합한 단기 전면전의 가상 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남 전술핵공격 능력을 증대
- 셋째, 세 차례의 열병식과 핵무력 건설 활동의 헌법 명기를 통해 핵무력 정책의 불변성을 강조
  - 최고인민회의(제14기 9차)에서 핵무력을 헌법에 명문화(제4장 58조)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 불가역적인 핵무력 의지를 재천명
  - 올해 세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각종 신무기의 공개와 전술핵 운용부대의 첫 참가 등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
- 넷째, 대러 무기 수출을 위한 국방경제산업의 활성화에 주력
  - 정전협정일(7.27.) 계기 방북한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과 대러 포탄 수출 관련 협정을 논의
  - 8월 이후 김정은은 대구경 방사포탄, 저격 무기, 전략 순항미사일, 미사일 발사대차, 전투장갑차 생산지도 등 군수공장을 집중 시찰
  - 특히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대러 불법 무기 수출을 새로운 자금줄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
- 다섯째, 핵무력 정책의 심화에 따른 군내 사회 부작용 현상 가시화
  - 올해 8월 박정천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복귀와 당 군정지도부장 임명은 군정지도부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

---

4) 두께 50~60cm로 추정되는 ‘화산-31’ 전술핵탄두 장착 가능 무기는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단거리미사일 시리즈 KN-23, KN-24, KN-25와 수중 무인공격정 ‘해일 1형과 2형’, 순항미사일 ‘화살 1형과 2형’ 등이다.

- 당이 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지도한다는 부서 명칭은 기존 총정치국<sup>5)</sup>이 행사한 부대 관리 및 군사지휘관 통제 권한의 약화를 의미
- 총정치국이 아닌 당이 직접 부대와 군사지휘관을 통제하는 당 군정지도부의 존재는 당이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한군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징후일 가능성
- 지난 10년 이상 핵·미사일 강화 관련 군수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는 군내 재래식 부대 간부의 불만 및 비군사 부문 간부들의 박탈감을 증대시켰을 가능성

## □ 사회

- 코로나 19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연초 시작된 북한 내 아사자 발생과 대규모 정치행사 개최에 따른 고위층과 주민들의 정신·육체적 피로감 등은 사회 전반에 불만을 확산시킨 요인
- 지난해 삼중고에 따른 최악의 민생환경은 올해 들어서면서 개성 등에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북한 전역에 식량난 초래
- 올해 식량난과 농사가 북한 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 북한 당국은 2월 농업 분야와 올해 농사 관련 내용을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단독 의제로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급급
- 특히 올해 식량난은 당, 내각, 보위·안전기관을 비롯한 고위층에 공급되던 식량 공급량과 질에 차질이 생겼고, 시장에서 곡물 통제가 강화되면서 당국에 대한 주민 불만 확산을 촉진
- 열악한 민생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 권력층·주민 불만 확산
- 결국 체제안정과 주민결속을 주요 목표로 계획하고 추진했던 대규모 정치행사들은 주민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계기로 작용, 북한 사회 전반에 주민 불만과 반항 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 초래

---

5) 국가보위부장 정경택의 총정치국장 임명은 그동안의 총정치국 위상을 하락시키고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올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을 명분으로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한 주민통제 강화는 사회 전반에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경제

- 여전히 ‘자력갱생’을 생존전략으로 택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와 농사를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로 추진
  - 김정은은 농업문제를 주요 의제로 2월 제8기 7차 전원회의에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2022년도 사업 정형 보고’를 청취
  -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 제하의 강령적 결론 제시
  - 알곡 생산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의 첫 번째 고지로 재확인, △전반적 관개체계 완비 △농기계 많이 생산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늘이는 것을 주되는 농업발전 목표와 과업으로 제시
  - 김정은이 진두에 선 경제정책 드라이브로 올해 농사 작황이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자평<sup>6)</sup>하면서 지도력과 영도력을 집중 선전<sup>7)</sup>
  - 한국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82만 톤으로 작년 451만톤보다 31만톤(6.9%) 증가한 것으로 추정<sup>8)</sup>
- 올해 3년차인 5개년 계획 이행 부진 속 국가 동원력 강화
  - 경제난 심화 속에 5개년 계획 3년차 추진에 필요한 국가 동원력을 총발동(軍, 청년동맹 등)하며 난제 타개와 역점과제 추진에 전력<sup>9)</sup>

6) ‘조선중앙통신사 상보’(2023.6.8.)를 통해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개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 우리 당 농촌건설 역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7) 『로동신문』, 2023년 11월 9일.

8) “올해 북한 식량상황 개선...식량작물 생산 증가.” 『농축유통신문』, 2023년 12월 21일.

9) “평남탄전에서 사회주의애국운동, 증산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다.” 『로동신문』, 2023년 4월 23일.



- 경제 목표를 △농업생산 △건설(평양시, 검덕지구 등) △산업 현대화(금속·화학 등 주요 대상) △시·군 농촌건설 등에 집중
- 2023년 10대 최우수기업 선정<sup>10)</sup>을 통해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달성 독려
  -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안주뽕프공장,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단천제련소, 청진 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 삼흥경제정보기술사, 나래도자기공장, 천리마타일공장, 대동강맥주공장
- 코로나 19 완화 및 국경개방 확대로 무역을 통한 부족 자원 유입 시도
  - 경제난 해소를 위해 對中 교역 재개, 곡물,<sup>11)</sup> 화학비료, 가공무역 원자재(가발), 의료용품 수입 규모 확대<sup>12)</sup>
- 러북 정상회담과 대러 무기 수출로 부족한 외화 획득, 첨단 군사기술 습득 및 경제의 숨통을 트는 계기 활용
  - 4년 5개월 만의 두 번째 푸틴-김정은 러북 정상회담(9.13.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과 대러 무기 수출(6,000억 원 상당 추정)로 정찰위성을 포함한 군사기술과 함께 거액의 외화 획득, 경제관계 복구로 대북 제재 출구 마련, 경제난 해소에 모멘텀으로 작용 예정
  -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9.28. 북한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모스크바를 실무 방문했고,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12.11. 평양을 방문해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및 의정서 조인

---

10) “성·중앙기관·도인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우수한 기업 40개 중에서 선정... 선정된 기업들은 국가적으로 생산물의 많은 량을 맡아 보장하면서도 공업총생산액과 종업원 일인당생산액, 평균노동보수수준이 높은 기업체들,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한 기업체들, 자체의 힘으로 생산토대를 구축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기업체들이다.” 『로동신문』, 2023년 10월 2일.

11)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작년 한 해 1년치 수입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간 수입한 쌀은 전월 대비 약 2.5배 증가한 4만 6천700t으로 집계되었다.” 『VOA』, 2023년 5월 5일.

12) 中 해관총서에 따르면, 금년 1~3월 누적 교역액은 총 4억 8,585만불로, 작년 同期 대비 147% 증가, 국경봉쇄 이전인 2019년 同期의 9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외 】

### □ 대미(對美)

- 올해에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를 기조로 한 대북정책에 도발과 위협 발언으로 화답
  - 올해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각종 도발을 지속, 핵·미사일 고도화와 향후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 마련을 위한 전략적 의도를 시현
  - 북한은 전략적 목표가 대미관계 개선이기는 하나, CVID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의 등판 때까지 핵 고도화를 다그쳐 향후 협상을 위한 확실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목표
- 한편, 전략적 의도 하 대미 도발과 비난 수위를 나름 조절
  - 올해 주요 담화들에서 한국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낸 데 비해 미국을 향해서는 발언 수위를 조절
  - 북한의 대전략 목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해 정상국으로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임

### □ 대중(對中)

- 올해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강화하려고 노력
  - 김정은은 계기 때마다 시진핑과 장문의 축전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중북 관계가 특수한 관계임을 과시<sup>13)</sup>
  -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연일 강조
  - 12월 18일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방중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으로 4년 만의 중북 고위급 회담 성사

---

13)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의 정식 해제 시행 이전 첫 외국인으로 주북 중국 대사의 입국을 허용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주북 중국대사의 부임 환영연회도 베풀고 함께 낚시를 하는 등 이례적인 환대 동향을 과시했다.

- 한편,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더욱 접근
  - 시진핑과 공식적인 인물들이 중조 친선협조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sup>14)</sup>
  -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뒷배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건건이 저지, 오히려 북한을 두둔
  - 최근 자국 내에 수감했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로 북송
- 하지만 김정은의 방러를 전후하여 중북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상황
  - 북한은 최근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
  - 김정은은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언명
  - 한편,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밀착에 신중한 태도<sup>15)</sup>

## □ 대러(對러)

- 최근 러북 사이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접촉 활성화
  - 김정은의 9월 방러 이후 7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계기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10월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등 주요 일정 지속
  - 11월 중순 평양에서 제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

14) 9월 9일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5) 5년 전 70주년 행사 때는 당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서열 3위)가 방북했으나, 이때와 비교하면 방북단의 급수를 낮췄다.

- 최근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방북해 북한의 총리, 대외경제상과 회동
  - ※ 관광, 통상·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 특히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 인력의 러시아 파견 문제가 토의된 것으로 추정
- 북한 대외경제 대표단도 12월 중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해 양측 협력 확대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계획
- 러북 간 연대와 지지를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연대와 공조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연대·지지 표명<sup>16)</sup>
  - 북한은 러-우 전쟁을 기회로 러시아를 활용, 외교적 활로를 확보
  - 러시아는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대북 추가 제재에도 건건이 제동
- 러북 간 군사 분야에서 협력과 밀착 급격히 확대
  - 7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 시 북한 무기 전시장을 참관
  - 9월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러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은 러시아의 주요 군사 시설들을 시찰
  - 11월 북한은 3차례 시도 끝에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sup>17)</sup> 받아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
  - 러북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수물자 제공이 본격화<sup>18)</sup>
- 최근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중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중국 중심의 외교에서 러시아로의 다변화를 시도

---

16) 지난 12월 22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러시아 해외자산의 압류 방안을 검토 중인 G7을 '강도'라고 비난하였다.

17) 9월 김정은의 방러 시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에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고, 11월 22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여 현장에서 찍은 기념단체사진에 러시아인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었다.

18) 러시아와의 교류거점인 라진항을 통한 물자 수송량과 러북 국경지대의 철도 통행량이 전례 없이 증가했다.

- 김정은은 4년 반만의 은둔 기간을 마치고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선택, “북·러관계가 대외정책에서 제1순위”라고 강조
- 이는 정치·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중국 중심의 외교에서 러시아로의 다변화를 모색
- 현재 김정은은 러북 관계를 정치·군사·경제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고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야심 찬 그림을 구상하고 실행 중

## □ 대반미국가(對反美국가)

- 북한은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는 정세를 이용하여 주요 국제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진
  - 러시아에 대한 무기공급으로 러-우 전쟁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중동 반미 국가들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중동정세 악화 유도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지지·동조 세력과 반미·반서방 대열 확대를 위한 외교전 강화
-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반미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
  - 핵문제를 놓고 서방과 대치한 이란과 서로 비호·두둔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협동작전을 적극 추진
  - 한편,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무장 단체들과의 불법 거래도 거리낌 없이 지속
  - 세계 각 곳에서 분쟁을 초래,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역량을 분산시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관여가 불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

## □ 대남(對南)

-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남 압박을 공세적으로 추진

- 남한 정부의 외교 행보와 국내 현안 관련 행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원색적이며 강도 높은 비난전 지속
  - 특히 한미일 군사 공조를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전쟁동맹’으로 매도, 한미동맹 강화가 전쟁 위험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
  - 윤대통령에 대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이 고발장 형식으로 “윤\*\* 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의 1년을 결산한다” 제하의 원색적인 비난글 연재
  - 지난 11월 21일 정찰위성 발사 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자,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 ※ 이후 9·19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2018년 말 시범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병력 재무장 실시
  -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전면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감행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빠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을 것이다”고 위협
- 탄도 로켓과 정찰위성 발사, 대규모 열병식 3차례(2.8. 건군절, 7.27. 전승절, 9.9. 정권수립일) 개최 등을 통해 고강도 무력도발 지속
-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전후로 잠수함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핵무인수중공격정 등 무력도발과 고체연료 ICBM 발사시험까지 강행하며 군사도발 수위를 고조<sup>19)</sup>
  - 건군절(2.8.)과 ‘전승절’(7.27.), 정권수립일(9.9.) 계기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무인정찰기 ‘셋별-4형’과 무인공격기 ‘셋별-9형’과 ‘위장방사포 중대’, ‘반탱크 미사일 중대’ 등 각종 민간무력의 전투력 과시
  - 지난 12월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 다음날인 18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면서 대남·대미 도발 강행

---

19) 김정은은 동해함대 제2수상함전대 시찰(8.21) 및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시, 남한 점령작전을 지시하고 해군에 SLBM 등 전술핵 실전 배치와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으며 제8기 7차 당 중앙군사위 회의(8.9)에서 남한 전 지역을 일제히 소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함으로써 더 이상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남북 간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
  -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금강산 방북 관련, 대남사업과 무관한 외무성이 입장을 발표했고 이후 김여정 담화와 김정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시각과 대남 입장 강조
  - 북한에서 특수기호인 ≪ ≫ (인용 괄호)는 원문의 인용·강조의 의미와 동시에 ‘소위’, ‘이른바’ 등의 ‘불인정’ 의미 등으로 활용<sup>20)</sup>
  - 12월부터는 공식 입장 발표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서(인용 괄호도 삭제) ‘한민족’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나라이자 ‘적대국’임을 부각

## 2. 2024년 북한정세 전망

### 가. 2024년 핵심 목표 및 관전 포인트

리더십/정치 : 2025년 당창건 80주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준비 단계  
 군사 : 경제성과 부진 전망 下 군사력 과시와 도발 기조 강화  
 사회 : 경제난·민생고 심화와 체제이완 증대  
 경제/산업 : ‘5개년 계획’ 성패를 좌우하는 마무리 단계로, 총력전 지속  
 대외 : 2024년을 대외·대남정세 변곡점으로 모색, 공세적 행보 예상

-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내부 정치적·정책적 수요가 증대할 전망
  - 5개년 계획 4년차 성과가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가용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20) 북한의 주요 관영매체에서 남한의 국회의원, 국방부, 통일부 등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 남조선 ≪국회의원≫, 남조선 ≪국방부≫, ≪통일부≫ 등으로 표기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다. 이는 과거 북한이 주장해왔던 “우리(北)의 핵은 동족을 겨누지 않으며 조선 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고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명분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남한을 공격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대내외 주요 계기 및 기념일 (월별 순)]

일자	내용	비고
1월 8일	김정은 생일 40주년	北 1984년생 확정 경우
2월 19일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50주년	1974.2.19/ 김정일 선포
2월 25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60주년	1964.2.25/ 김일성 발표
3월 초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예정	제14기 선거/ 2019.3.10
4월 10일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선거/ 2020.4.15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2020.11.3/ 바이든 당선

- 대외정세 측면에서도 북한의 ‘강대강, 정면승부’ 전략의 향배를 좌우할 중 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
  - 한층 강화된 핵무력 고도화 정책으로 정세 긴장을 조성하며 대미, 대남 압박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나. 부문별 전망

【 대내 】

□ 김정은 리더십/정치

- 2024년은 2025년 당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 준비 등 정치 일정과 환 경을 준비하는 ‘사전단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2024년을 당풍을 확립하는 해,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는 해로 추진하면서 당면한 당 결정 관철에 역량을 집중
  - 2월 중 노동당 ‘제9차 사상일꾼대회’(8차, 2014.2.)<sup>21)</sup> 등 주요 일정을 통해 체제선전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면서 총동원 분위기를 조성

21) 북한은 김정일(당시 당 선전선동부장)의 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 결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온 사회의 주 체사상화 강령’ 선포일로 기념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표현을 유지하다가 김 정일 사망 이후 2013년 2월부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으로 변경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 장성택 숙청(2013.12.) 이후 2014년 2월(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주년)에 제8차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고 전당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을 주문했다.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 3월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등 주요 일정을 체제구조와 내부 결속 강화 지향
- 5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와 주요 역점과제 추진을 통해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하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집중할 전망
  - 올해 추진한 ‘12개 중요고지’와 농업, 전력, 금속, 건설 등 계획경제 구조에서 가능한 증산을 독려
  - 먹는 문제가 민생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최우선 목표를 농업생산에 두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 군사

- 북한은 내년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비롯하여 ICBM 정각 발사 위협, 다탄두 시험, 전술핵 시험 실시 가능성과 함께 민수 선박을 활용한 대남 해상 전술핵 위협체계 구축에 주력할 전망
  - 북한은 내년 김일성 생일 및 한국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예정된 4월에 맞춰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의 기술 및 부품 지원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ICBM 정상 각도 발사 및 재진입 확인 시험 가능성
  - 그동안 북한이 ICBM의 정각 발사를 시도 하지 않은 이유로, 첫째, 인공위성의 부재로 정확한 발사경로 확인 불가, 둘째, ICBM의 정확도 및 재진입 기술수준 미흡 등이 제기
  -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현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ICBM 정각 발사 전 단계로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정각 발사 등이 한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

○ 내년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

- 과거 북한의 신무기 관련 도발 사례들은 신무기 시제품 공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완성된 무기로 시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시현
- 지난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실물을 공개한 이상 내년 한국 총선(4월) 혹은 미 대선(11월)을 전후한 시기에 한미의 비핵화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7차 핵실험에 이어 8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
- 그러나 7차 핵실험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고조, 중·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미 전술핵 도입 필요성 증대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ICBM 정각 발사, 다탄두 시험 등으로 대체할 여지

○ 내년 군사분계선 일대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 북한은 2023년 9월 전술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전면전 가상훈련 실시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한국 총선을 전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무력도발을 획책할 가능성
- 내년 한국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에게 한국의 대북정책 실패 부각, 핵전쟁 위협 등을 통해 친북·반전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선택을 강요
- 혹은 한국 총선 이후 한국 정부 위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성을 가장한 무력 충돌과 7차 핵실험 등을 동시에 강행하는 위기 고조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

○ 민수용 선박을 활용한 대남 해상 전술핵 발사체계 구축 전망

- 북한은 내년 한국군의 킬체인 대응 차원에서 기만성과 기습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 해군함정이 아닌 민수용 대형 선박 개조를 통해 미사일 발사체계를 선보일 가능성
- 대형 해군함정의 건조 혹은 개조를 통한 해상 발사체계 구축에 드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 한국군의 감시 능력 등을 고려하면 중고 선박 등을 수입해 내부만 군사용으로 개조
- 내년 3월과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기간에 맞춰 한국군의 킬체인에 대응해 기습적으로 해상에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체계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

## □ 사회

- 경제 총동원에 의한 사회적 부담과 주민 불만 등이 증대할 전망
  - 5개년 계획 4년차 과제 추진과 농업 증산 등 주요 정책과제 수행에 전담, 전군, 전민을 총동원하는 조치 강구, 이에 따른 부작용 예상
-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등 북한 당국의 통제정책이 강화될 전망
  - 권력층의 부정부패·관료주의 척결과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이완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당적·법적 조치 강화
  - 향후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 주민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12.21.)에서 ‘인민반 조직운영법’ 채택

## □ 경제

- △자력갱생 △농사 우선 △선형 산업(금속, 화학, 전력 등) 부분의 현대화·정상화 △단기적 건설프로젝트 완성에 집중
  - 총체적인 경제전략 기조는 대북제재 하 여전히 자력자강,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recycling), 과학기술 중시로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자력갱생으로 살아가는 생존전략 유지 전망
  -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구호 아래 도시/군의 균형적 발전, 시군 중시 확대, ‘사회주의농촌테제’ 목표 아래 농촌개발정책 확장 전망
- 특히 중북 무역 정상화로 경제난 해소를 추구하고, 대러 무기 거래 확대로 군수산업 활성화 및 민수경제 회복 계기로 활용 예정
  - 러시아에 외화벌이용 근로자 파견 확대, 안보리 결의 위반 주목
  -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확대를 통한 경제난 해소 시도 유의 필요

## 【 대외 】

### □ 대미(對美)

- 미북 협상장으로서의 복귀 타임도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 다분
  - 대선 이후 미북 관계 추진을 위해 트럼프 당선 분위기에 일조하고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할 다양한 전술적 미끼를 던질 것으로 예상
- 대선 캠페인 본격화 시기(2월)와 한미연합훈련 시작(3월)에 맞춰 강력한 도발 카드로 북핵 문제를 중심 이슈로 부상시킬 가능성
  - 미중 패권 경쟁,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밀려난 한반도 문제의 대외정책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도발 필요
  - 미 대선에 맞춰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전략 도발 가능성 농후

### □ 대중(對中)

- 중북 관계는 상호 대외전략적 수요에 따라 밀착이 강화될 가능성
  - 북한 경제는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대중, 대러 관계의 전략적 균형을 조절해가면서 중러북 對 한미일이라는 전략적 대결구도를 굳히고 어부지리 획득을 꾀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이 최근 거리두기 조짐을 보이는 시진핑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방중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러북 밀착 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 □ 대러(對러)

- 최근 조성된 국제적 환경 下 러북 공조가 더 절실한 상황
  - 북한은 러북 밀착을 통해 많은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적 이익에 포커스

- 대내적으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결속에 유리한 성과로 활용
- 경제적으로는 대북제재를 해소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무기 지원 대가로 군사기술 지원 획득
- 러북 정상 간 각 분야 협력이 큰 틀에서 논의된 만큼 활발한 고위급 및 실무급 왕래와 접촉 등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 대남(對南)

- 북한은 핵무력의 전략적 우위를 내세우며 내년 총선을 목표로 한 대남 선전 공세와 군사도발, 사이버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체형 ICBM, SLBM, 정찰위성 발사와 동시에 해군의 핵무장화 추진과 동서해상에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 전면 차단과 단절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남한의 주요 정부 기관과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 등도 예상
  - 향후 대남 전문기관들을 완전히 없앤다는 공식 입장 발표와 지난 시기 남북 간 특수관계를 전제로 체결했던 남북 합의 무효화 등 초강수를 둘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들이 온·오프라인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총선과 향후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남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봉쇄조치가 완전히 풀리는 시점에 중국 베이징과 선양 등 해외에서 남한 국민들(민간단체 관계자)과의 접촉 계기 이용,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남남갈등을 목표로 하는 대남 공작 등도 추진
  - 코로나 19에 따른 중북 국경봉쇄조치가 완화되고 남한 국민들의 해외(중국) 이동이 많아질 경우,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 선교활동을 재개하는 우리 국민 유인·납치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

- 통전부 소속의 해외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제2의 하마스 사태는 한국에도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여론 확산에 주력
  - 특히 이번 하마스 사태를 남북·미북 대치 상황과 연관시키면서 군사분계선 북한 지역에 배치된 장사정포 동시발사 능력을 강조, 남한 내 반미·반정부 여론몰이에 총력 집중
  -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남남갈등을 격화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대남 공세에 주력

# 2023년 국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 I. 국제 및 안보 정세 개관

## 1. 국제안보환경 및 한반도 주변정세

### 가. 2023년도 평가

####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와 글로벌 진영화 추세 심화

- 냉전 이후 미국 일극체제에 기반을 두고 지속되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초세계화의 반작용, 미중 전략경쟁 격화, 러-우 전쟁과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퇴조 추세
  - 2023년도에도 러-우 전쟁의 장기화, 자국 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사우스의 부각 등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해체 가속화
- 러우 전쟁을 계기로 서방 진영의 연대가 공고화되었으나 이에 대응하여 중러(글로벌 이스트)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2023년에는 글로벌 사우스 진영의 독자적 활로 모색 현저
  - 지정학적 측면에서 세계질서는 유라시아판에서의 미(서방)-러 대결과 인도-태평양판에서 미-중 대립이 병존하는 형국으로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의 대립 양상
  - 2023년 8월 BRICS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6개국의 BRICS 가입이 승인되는 등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방과 중러 사이에서 실리주의 외교를 추구

## □ 미중 전략경쟁의 조정 국면 진입

-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하마스 전쟁의 발발, 글로벌 경제침체 우려 속에 미중간 전략경쟁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미중 모두 장기전을 대비하여 힘을 비축하는 양상
  -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공급망, 대만문제 등 주요 현안에 이견을 노정하면서도 군사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하는 등 미중 경쟁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태도 시현
-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디커플링의 비현실성을 강조하며 대신에 디리스크링(de-risking)을 내세우고 있는 바, 미중 양국은 첨단기술 경쟁은 지속하면서도 글로벌 현안이나 지정학적 갈등에서는 협력 모색 흐름

## □ 동북아 역내 정세도 진영화 양상 추세

- 2023년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러북, 중러간 밀착이 심화되는 등 진영화의 양상 대두
  -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정례화에 합의하는 등 한미일 연대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
  - 9월 13일 보스토니치 러북 정상회담은 러북 군사협력을 노골화하였으며 10월 18일 일대일로 포럼 계기 중러 정상회담은 최근의 중러간 전략적 제휴 의지를 재확인
- 다만 서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이나 중러북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고려할 때 러북, 중러 밀착이 중러북 삼각 연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 한반도 정세는 미북관계 소강과 남북대립 격화의 패턴 시현

-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러시아, 중국에 집중하고 대북 정책은 전략적 무관심을 견지하고 있어서 북미관계 소강과 남북대립 격화 패턴 지속

-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또 다른 전선이 동북아에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분석
- 북한은 2023년에도 화성-18형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대미, 대남 도발을 지속하면서 남한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는 등 대남 적대시 노선 노골화
- 7차 핵실험 시기를 조절하는 등 도발 수위를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사문화로 대남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

## 나. 2024년도 전망

### □ 글로벌 다극화 추세 가속화

- 2024년에도 미중 양대 초강대국을 필두로 유럽, 러시아 등 전통적 열강들, 성장하는 지역강국들간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다극화 현상화 가속화될 전망
  -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속하는 인도, 사우디, 브라질, 남아공 등 지역강국들의 독자적 행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독일, 호주 등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도 미국의 동맹외교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자율적 행보 강화 예상
- ※ 미중 양국은 압도적 초강대국들이지만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 비교하면 국제정치 권력배분 구도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양극체제로 정의하기에는 미흡
- 2024년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 하락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보호주의적 자국 우선주의 확산도 글로벌 다극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

### □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전화 추세 지속

- 미국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채택하여 미중경쟁을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시키고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태도

- 중국도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는 등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표출
- 2024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조야에서 표면적으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분위기는 지속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첨단기술 경쟁에 주력할 전망

#### □ 동북아 역내 전략구도의 복합화 가능성

- 2023년에는 동북아 역내에서 한미일 대 중러북의 대립구도 부각되었으나 2024년에는 중국 요인으로 인한 기존 역내 전략구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2024년 상반기에는 금년에 지연된 한일중 정상회담이 5년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사될 경우 기존의 진영간 대립구도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음
  - 한일중 협력의 부각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이 이격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냉전 구도 약화의 계기로 작용 가능
- 향후 동북아 역내 전략구도는 한미일 대 중러북이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한미일 대 중국, 한미일 대 러북 등 기존 전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중 협력이 완충지대로 부각되는 복합화 가능성

#### □ 한반도 정세는 한미의 주요 선거 계기 유동성 증가

-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한 바,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한 시기에 한미의 대응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우리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상존
- 2024년 미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미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미 대선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각발사 등 대형 전략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 결론적으로, 2023년 한반도 정세가 미북관계 소강 및 남북대립 격화의 패턴이었다면 2024년 한반도 정세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2. 국제군사안보 정세

### 가. 2023년도 평가

#### □ 미중 패권경쟁 구도 下 미·중 군사적 대립 심화

- 미중 간 대만문제 갈등 지속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양국 군사력 증강을 위한 AI 등 첨단 군사기술 확보 경쟁 심화
  - 美해군 구축함의 파라셀군도 해역에서의 '항행자유' 작전 실시, 美연안전투함의 남중국해 중-필리핀 분쟁 압초 인근 통행(2023년 12월) 등에 대응해 중국 남부전구 전력이 출동하는 등 대립 심화
  - 2023년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한편 필리핀은 해안경비 기지 신설, 미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및 연합훈련 실시 등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노력 가속화
- 인·태지역은 미 주도의 AUKUS, QUAD 출범으로 대중 포위망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선 중러북 군사협력 가속화로 역내 진영화 대립 가중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다국적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공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훈련 참가국들을 확대하려는 시도 증대

#### □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국제안보의 불안정성 심화

- '러·우 전쟁' 장기화로 국제적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NATO의 군사력 증강 등 나토와 러시아 간 안보경쟁 및 대립 심화

- 러우전쟁 종결 양상에 따라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물론, 중러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및 중동의 지정학적 안정성 훼손으로 국제 안보환경의 유동성 증대
  - 국제유가 급등, 인플레이 위험 증가 등 경제분야 악영향으로 국제경제의 탈세계화 가속화는 물론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는 계기
  - 중동분쟁에 대한 미중의 역할 약화가 목도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관심이 중동으로 전환되어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가 예상되는 등 추가 분쟁 시 미국의 동맹국 지원 여력에 대한 의구심 증대

####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심화 및 북·러 군사 과학기술 협력 확대

- 북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정찰 위성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가시화하는 도발 지속
  - 북한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일방적 전면 파기 선언, 노골적인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은 물론 군사도발 획책 가능성 농후
  - 중러북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지원에 호응한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이전 활동이 북핵·미사일 고도화 촉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

#### 나. 2024년도 전망

##### □ 세계적 군사분쟁 해결 난망과 교착 국면 지속 가능성

- 러시아의 본격적 전쟁준비,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국제사회의 지원 제한 가능성 등으로 우크라이나전의 예측 가능성 곤란

- 러시아의 전투병력 15% 증원 등 본격적인 전쟁태세 전환, 국제사회의 전쟁 피로도 증가, 美공화당 등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대규모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 증대 등으로 향후 전쟁 상황 불투명
- 우크라이나는 탄약과 전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포격과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내년 美 대선까지 전쟁 교착 국면 장기화 전망
- 이스라엘-하마스전은 친이란 세력의 개입 가능성과 이스라엘의 전략목표를 고려했을 때 분쟁의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 농후
-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본격 돌입한 상태에서 미국은 확전방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 이스라엘의 전략목표가 '하마스의 완전제거'로 1년 이상 장기전 수행 계획을 고려했을 때, 분쟁 양상은 고강도 지상작전 후 저강도 국지분쟁의 형태로 지속될 전망

**□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갈등 증폭으로 불안정성 증대**

- 대만 해협 인근에서 미중 간 군사력 증강 배치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긴장 수준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
- 대만 사태를 대비하여 미국이 아태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추진 시사 및 중국 또한 美항모를 겨냥한 DF-21, DF-26, DF-17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 계획 시사
-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는 민진당과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개선하려는 국민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 미중 간 군사적 분쟁 및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

- 대만 및 남중국해 지역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중 양국군의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 재개 등 ‘군사당국간 대화’의 제도화에 합의
- 양 지역에서 군사충돌 방지의 공감대 형성 및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할 계획이 없음”을 천명하였으나, 양국 간 근본적 인식차의 존재로 완전한 데탕트는 불가능한 상황

## □ 주요국 간 핵·재래식 군비경쟁 심화

- 미국과 러시아의 핵관련 조약 탈퇴 및 지역 핵무장 국가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으로 ‘新핵무기 경쟁시대’의 도래
  - 미러 간 핵군비통제조약의 연이은 탈퇴, 중국의 핵레짐 불참 등으로 NPT 체제의 효용성 감소 및 수직적 핵확산 심화 전망
  -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지역 핵무장 국가들 또한 경쟁적으로 핵무기 증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 핵질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각국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 및 재래식 첨단 무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미국은 2023년 대비 3%대의 국방비 증액, 영국·독일·일본 등은 GDP의 2% 증액 추진, 중국도 2023년에 7% 이상 국방비를 상향하는 등 주요국들의 국방비 경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 미국은 최신형 콜롬비아급 잠수함 및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등을 확보 추진, 중국 또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의 실전 배치 추진 및 2030년 까지 최소 4개의 항모전단 추진 계획



## □ 주요국의 AI 등 신기술 이용 군사력 경쟁 치열

- AI 등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두 개의 전쟁에 따른 각 지역과 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AI 기술을 이용한 자율임무 수행, 무인기술 및 양자 보안 기술 등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전개
  - 각국들은 해당 기술의 무분별한 군사적 활용 방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해당 규범의 부재 및 구속력 약화로 당분간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

## □ 북한의 핵·재래식 무력 도발 가능성 증대로 한반도 안보의 긴장 국면 초래

-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핵타격 능력 및 한미 연합군에 대한 표적 확보 능력에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 농후
    -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제7차 핵실험 및 정상각도 ICBM 발사 가능성 상존
    - 그간 북한이 공언한 전술핵탄도탄 잠수함의 시험 발사 및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추가 정찰위성 발사 등 전략 도발 가능성 농후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우리 군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등을 이유로 빈번한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수립, 미국의 對韓 무기판매등을 구실로 러북 군사협력 정당화 및 러북 연합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긴장 국면으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
    - 비행금지 구역 관련 한국군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등으로 우리 공중 정찰감시 자산 및 NLL에 대한 해상 도발 가능성 증가
- ※ 북한은 2024년 대만 총통선거,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 주요국의 리더십 변동 및 선거 상황을 관찰하면서 존재감 과시 및 관심 유도 차원에서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3. 국제경제안보 정세

#### 가. 2023년도 평가

##### □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 지속

○ 미국은 이미 반도체 지원법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조치에 이어 2023년도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적용해 세부 사항을 더욱 강화하며 대중국 견제

- 12월 1일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해외 합작사 중 중국 기업 지분이 25%가 넘는 업체에 대해 2025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 발표

※ 미국은 2023년 2월 31일과 4월 18일 IRA 시행 규칙 및 조건을 발표

##### □ 중국의 '자원무기화' 본격화

○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이어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응하여 '자원 무기화'를 확대

- 중국은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자원인 흑연의 수출 통제를 본격 시행
- 중국은 올해 10월 말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2021년 '요소 수 사태'를 겪은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한국의 요소 관련 업체들을 압박

##### □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3고 현상 세계경제에 영향

○ 코로나 19 팬데믹과 세계적인 경제 침체, 주요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시장에 전반적인 불안감 조성

- 러·우 전쟁 지속은 세계 식량 공급 및 식품 가격 안정화에 위협 요인으로 발전, 특히 최근 중동 사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을 초래

## 나. 2024년도 전망

### □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재편에서 중국 배제 지속

- 미국은 공급망 차원에서 핵심 물품들에 대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배가할 전망
  - 각종 수출 통제, 수입 규제, 투자 규제 방식의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국제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국 배제 지속
  - 미국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삼아, 컴퓨팅과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확대하는 전략을 적극화 할 전망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중국의 자원무기화

-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중심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응하여 경제·기술적 자립자강 전략을 더 적극화 할 것으로 예상
  - 국내순환 주도의 쌍순환 정책 추진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흑연, 니켈, 희토류, 칼륨, 게르마늄 등 전략 물자의 수출 통제에 기반한 ‘자원의 무기화’를 활용해 목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유지 노력을 더 가속화 할 전망
- ※ 그러나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사회 인구감소, 국내외 투자 감소 등으로 향후 중국 경제성장 전망은 불확실

## □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지속

- 세계경제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세계적인 부채증가·고금리,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공급 충격으로 부정적 전망 증가
  -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침체, 실업률 증가 등의 장기적인 저성장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세계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발전
  -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유동성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닥친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추가적인 경제활동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동 전쟁 확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가 발생하면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
    - ※ 골드막 삭스는 2023년 12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와 러·우 전쟁 지속으로 내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전망

## II. 국제정세 평가 및 전망

### 1. 미국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가. 2023년도 평가

##### □ 대내 정세 평가

- 2023년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임기 3년차로 내수시장 증진과 회복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평가받는 한 해
  - 2021년 취임 이후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통해 대규모 부양책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추진
  -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2023.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5.2%로 집계되었다고 발표, 고성장과 노동시장 강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연착륙 중
  - 다만, 여론조사 결과 美 국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 수준은 아직 낮은 것(25% 이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의 정치적 파장에 주목할 필요
- 정치권에서는 2022년말 중간선거 이후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우세의 분점정부가 형성, 대내외 각종 이슈를 둘러싼 충돌 가중
  - 2023.10.~11월중 차년도 정부 예산안 승인을 둘러싼 충돌로 연방정부 첫 다중 위기상황 초래,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공화당) 의원이 탄핵되는 등 혼선 가중

-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에 맞서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한 국경 예산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충돌 지속
-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들인 현터 바이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일년 내내 뉴스를 장식, 양당간 대결구도를 심화시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anti-semitism) 확산, 낙태금지법 시행, 인종차별, 마약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속
  -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반유대주의 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세, 의회 청문회에 증언한 아이비리그 명문대 총장이 사임하며 논란 가중
  - 유색인종 차별과 이로 인한 반사회적 폭력행사에 대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옹호 발언이 겹치며 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폭력 및 약탈행위 빈번 발생
  - 텍사스 주에서 낙태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마약(펜타닐 등) 확산 등 사회-경제-문화적 이질성이 확대되며 각종 사회문제 대두

## □ 대외 정세 평가

-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조체제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 무기 및 인도적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
  - 역사적 비동맹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NATO 회원국을 확대하고 NATO와의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EU 국가들과 경제, 에너지, 기술, 안보협력 확대
  - 2023.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간 역사적 정상회담 개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함과 동시에 한-미, 미-일 양자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

- 對중국 견제 구도를 유지하며 협상의 공간을 창출하려는 시도 병행
  - 미국, 호주, 영국 3국 안보 파트너십인 AUKUS를 통해 대중국 위협 견제 및 3국의 방위산업기지를 통합하여 핵추진 잠수함 생산, 인공지능, 전자전 등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강화
  -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일 협력 등 소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지속적인 노력 경주
  - 대중국 견제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완전한 탈중국(de-coupling)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디리스팅(de-risking) 및 유화적 대화채널 또한 확보 시도
    - ※ 미국의 대중 대화채널 복원 움직임에 따라 유럽 주요국과 호주 등도 정상외의 방종을 통해 대중국 경제 리스크 관리에 나섬
- 유엔 개혁,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사우스 견인, 신형 기술 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 리더십 확보 노력
  - 2023.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통한 개혁방안을 제시, 글로벌 거버넌스 복원을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 추진
  - 2023.12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 도출, 탄소감축을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이행노력 확인
  - 2023.9월 뉴델리 G20 정상회의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사우스를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포용하기 위한 노력 이행

## 나. 2024년도 전망

### □ 대내 정세 전망

- 2024년 초부터 대선 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되며 상반기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하반기에는 양당 후보간 격돌이 예상

- 2023년 말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로 조기에 부상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중
- 민주당 대선주자가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주자 선출 과정이 '24년 상반기 모든 정치 이슈를 커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2024.1월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경선을 시작으로 초반 선거전에서 대의원 확보 결과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
  -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주자 선출이 유력하나, 각종 사법리스크로 인한 공화당 후원그룹의 이탈로 인해 디샌티스 텍사스 주시사와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 후보주자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
- 견조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을 통한 리세션 방지 및 대선을 위한 중산층 관리
  - 2021년부터 추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특히, 중산층) 진흥 및 인프라 정책인 “Build Back Better”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지속 추진 및 보완 예상
  - 엘런 미 재무장관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의미있게 둔화하고 있다고 언급,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까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자신감 표명
  - 내수진작, 인프라 투자, 국내산업보호를 목표로 한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부작용이나 경기침체 유발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 ※ 미국이 견조한 경제지표를 유지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선거결과가 경제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 의견 有
- 사회문화적 갈등요인이 국제 이슈 및 선거전과 결합하여 더욱 증폭된 형태로 발현될 우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반유대주의 정서의 확산과 이에 대한 유대인 기득권의 실력행사 등이 정치, 경제, 학계 등 지식인 커뮤니티에서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 존재
- 이민자 통제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대한 입장과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이 충돌하며 해외 이주민에 대한 보호정책 및 유색인종 차별에 관한 사회문화적 충돌이 정치권 이슈로 확대될 것
-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민감한 사회문화 이슈를 극우적 해석을 통해 정치권에 투영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높음

## □ 대외 정세 전망

- 대중국 강경정책 지속 및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
  - 2024년에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법안 보완에 주력할 것
  -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하거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 작업을 지속, 중국과의 장기간 경쟁에 대비
  - 기존 국제질서 내에서 중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소다자 중심 국제레짐을 활용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서의 규범 세팅을 지속할 것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 고조 우려
  - 2024년 글로벌 지정학 경쟁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복원하고 소다자 중심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를 기치로 삼는데 반해,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

-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는 신고립주의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구사,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경우 글로벌 질서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 높음
  - ※ 물론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이전 집권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방향의 대외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동맹국과의 거래적인 관계와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多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글로벌 리더십 시험대 오를 것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EU 및 서방국가들의 피로도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국제법 준수여부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며, 이를 미국이 해결(혹은, 중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 유엔이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를 통해 책임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거 전가할지, 또는 주인의식을 갖고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 국제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 대선결과가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 일본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가. 2023년도 평가

#### □ 대내 정세 평가

- 일본 경제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여파로 국내물가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 경기회복세는 불투명
  - 일본은행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기타 소비자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엔화 약세에 기인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일본 내 개인 소비력이 강화되지 않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 일조
- 기시다 총리는 각종 정책실패와 리더십 부족, 인플레이션 악화로 지지율 하락
  - 마이넘버 카드 도입 부작용, 저출산 정책 실패, 기시다 총리 자신의 색깔 없는 아베 따라 하기, 물가 상승에도 중산층 소득 정체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자민당 보궐선거 패배 이후 최근 기시다 내각의 20%대 최저 지지율은 기시다 사퇴론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낮은 지지율로 중의원 해산도 불투명하며 동시에 뚜렷한 차기 총리 후보군 부재로 기시다 퇴진 역시 불투명한 상황

## □ 대외 정세 평가

- 일본을 둘러싼 대외 정세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강화된 한미일 협력 공고화는 지정학적 구도 안정화에 기여
  - 한일 관계개선과 성공적인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개최 이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된 한미일 동맹 구조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협력 프레임
  -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일본은 한미일 협력과 인태 구상을 기반으로 NATO,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지정학적 안정 추구
- 기시다 내각은 안보환경의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방위력 증강 계획을 통해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확보하는 등 보수주의 강화
  - 기시다 내각은 반격능력 확보, 방위비 5년 내 GDP의 2배로 증액, 미사일 사거리 1500km 까지 연장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수입 등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여론은 부정적

-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제국주의 역사를 제외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역사 전쟁) 등 주변국들과의 역사화해 없는 보수 민족주의의 강화 기류는 동아시아 정세 불안정 요인

## 나. 2024년도 전망

### □ 대내 정세 전망

- 일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소비회복이 가시화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가능성 제한적
  - 전년 동월대비 일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23년 1월), 3.4%(4월), 3.1%(7월), 2.8%(9월)로 평균 3%대를 지속
  - 2024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물가상승과 저임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가져올 수 있는 더블 딥 상황을 우려, 민간 소비력 회복의 가시적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최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퇴진 가능성도 있지만 뚜렷한 차기 후보군 부재는 기시다 재집권 역시 가능
  - 기시다 총리는 2023년 9.13 개각을 통해 여성 각료와 최초 입각자들의 비율을 높이는 등 쇄신 이미지로 지지율을 제고하고자 했지만 지지율 하락과 경제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조기 퇴진, 총재 경선 패배 가능성
  - 기시다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 대만위기, 미중 전략경쟁 격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세 악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고조 시 자민당 보수층의 현상유지와 안정 기대 여론 고조로 '인기 없는' 재집권 가능성

## □ 대외 정세 전망

- 2024년도에는 한미일 3국 협력 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각국에 따라 예정되어 있어 대외 정세의 변동성도 클 전망
  -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 총리 사퇴 가능성과 함께 내년 여름 자민당 총재 재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비해 저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는 한일 관계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 왔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미국에서는 내년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제고 등 미국 국내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는 기시다 정부에게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 대북, 대중, 대러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
-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일 협력관계는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재무장이 금지된 상태에서 일본 안보에 선택이 아닌 필수
  - 내년 미일 양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미일 관계는 현 상태 지속 유지, 강화 가능성
  -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기시다 총리가 재집권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자민당의 어떤 보수 지도자에게도 북 핵 위협, 중국의 패권적 부상 등 글로벌, 동북아시아 정치의 불확실성 고조는 미일 연대와 협력 강화 요소
- 낮은 지지율로 총재 선거에 임해야 하는 기시다 총리는 대내외적으로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등 보수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현실화 할 가능성은 제한적
  -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을 재결집, 총재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 개정, 반격 능력 확보, 방위력 증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역사전쟁 강화 등 보수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보수 세력 내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방위력 증강을 위한 증세(增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대외정책으로 현실화하기 보다는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의 활용에 보다 큰 의미를 둘 전망

### 3. 중국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가. 2023년도 평가

##### □ 대내 정세 평가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고려
  -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선언하고 코로나 19 이전 시기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조치로 강력한 내수 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높은 청년실업률(2분기 20.3%) 등 기대했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소비 촉진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이라는 공식적 정책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나 경기 부양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등 우려로 인해 쉽사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했음
- 인사, 조직 개편을 통한 집권 체제 강화 및 내실화
  - 2023년 양회(兩會)에서 인사,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시진핑 3기 정부의 기본 구상을 현실화하였으며, 특히 국무원 인사는 정산제(鄭珊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주임 외에 모두 기존 인사 유임
  - 양회에서 보고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3월 16일 발표된 <당과 국가 기구 개혁 방안>을 보면 향후 중국이 금융, 과학기술 등에 정책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

##### □ 대외 정세 평가

- 정상 외교와 유엔 중심 다자외교 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상 제고

- 미국과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우회 공간 확보를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다자관계 회복 및 국제 역할 공간 확대 노력
- 중국의 다자관계 강화를 통한 미·중 전략경쟁 회피 노력은 EU 등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으로 나타남
- 시진핑 주석의 국민 방문 등 해외 순방을 통해서 정상 회담 기제를 정상 궤도에 올리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 강화 및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 ※ 3월 20일~22일 러시아 국민 방문, 8월 21일~24일 BRICS 정상회의 참석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방문, 11월 14일~17일 APEC 회의 참석 및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 견인을 통한 전략 공간 확대

-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본격적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일대일로와 연결하여 ‘경제 영토’ 확장에 주력
- 중국은 코로나 19로 단절되었던 대외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홈그라운드 외교를 강화하는 등 영향력 확대 공간으로서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 중국의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중심 국가 역할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2023년 11월 2일 유엔 총회의 〈미국의 對쿠바 봉쇄 해제 촉구 결의안〉 투표에서 여실히 드러남
  - ※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 투표 결과 찬성187, 반대2, 기권1표로 나타났음

## 나. 2024년도 전망

### □ 대내 정세 전망

- 강력한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회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2023년 코로나 19를 공식 종료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으나 기대했던 만큼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경제 부흥을 위한 차원에서 확장 재정 정책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19 기간에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바, 자칫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경제
  - ‘봉쇄’를 경험한 중국 국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바, 인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적극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전망
- 체제 안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 구축에 ‘안정’ 변수 고려
  - 중국 당국은 경기 저조 국면에서도 2023년 반부패, 규율과 기율 위반 등 이른바 체제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사정’ 활동을 계속 실천해 왔으며, 체제 단속을 위해서도 2024년 더욱더 ‘사정’ 활동을 강화할 것
  - 그러나 ‘사정’ 활동의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경제활동 증가를 통한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소한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완급 조절은 시진핑 주석의 의지에 달려 있음
  -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집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체제의 결속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 강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고 특히 각종 교육 활동이 증가할 것
- 20기 3중전회 미개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증가
  - 2023년 12월 8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도 20기 3중전회 개최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2023년 20기 3중전회 개최는 미뤄지거나 당분간 개최되지 않으리라고 예상



- 당대회와 양회를 통해서 구축된 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3중전회는 관행적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늘 주목 대상
- 그러나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기존에 관례로 인식되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관행이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중국식’ 예측할 수 있는 정치는 점차 약화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 대외 정세 전망

- 중국 주도 다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대외영향력 및 역할 강화에 주력
  - 중국이 참여하는 SCO, BRICS 등을 통해서 국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적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
  - ‘일대일로’ 참여국에서 이탈리아의 공식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을 대상으로 더욱 공세적인 ‘일대일로’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주도권 확장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
  - 유엔 중심으로 다자관계 필요성과 유엔 중심 문제해결을 더욱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접촉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한층 더 강화된 관계 밀착 시도
  - 2023년 8월 남아프리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한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언급한 이후 중국 외교의 주된 방향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음
  -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 △활력 회복과 공동 발전 촉진, △개방과 포용을 통한 공동 진보 모색, △일치단결과 공동 협력 등 네 가지 주장 제시
  - 중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발언권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대만 총통 선거 등 국제사회 선거에 관심 제고
  - 2024년 글로벌 질서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국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
  - 대만 선거 관련하여 국민당과 민중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어 민진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샤프파워(sharp power)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작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선거에 대한 예의 주시 및 영향력 투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

#### 4. 러시아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가. 2023년도 평가

##### □ 대내 정세 평가

- 2023년에도 러시아인의 푸틴, 정부, 전쟁에 대한 포괄적 지지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전쟁 2년차 푸틴체제의 안정성 불변
  - ‘러우전쟁’ 발발 이후부터 푸틴체제의 불안정성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만한 여론 동향의 변화는 부재
  - 러시아 국민은 푸틴체제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을지라도 ▲경제 상황의 호전 ▲우세한 전황의 유지 등의 조건하에서 특유의 순응성·수동성을 드러내며 ‘암묵적 지지’ 입장을 지속
- 푸틴 정부는 자신들의 문명·민족·국가의 운명을 건 ‘실존적 투쟁’을 강조하며 반대파에 대해 통제·억압을 확대

- 러시아 독립 인권단체 OVD-Info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10월 기준) 반전 활동과 관련하여 19,747명이 체포됐고, 748명이 기소돼 254명이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가혹한 억압 정책 지속
- 프리고진이 주도하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등 일부 엘리트 간 갈등이 표출됐으나 비교적 빠르게 수습됐고, 러시아 통치 엘리트 대부분은 푸틴의 전쟁 캠페인에 순응·협조

## □ 대외 정세 평가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야심찬 대반격 작전을 효과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대미/대서방 대력 심화
  - 우크라이나는 미/서방의 적극적 지원 아래 6월 4일부터 대반격 작전을 본격화했으나 러시아의 ▲전략·전술의 재조정 ▲다중 방어망 구축 ▲병참의 우위 활용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 창출에 실패
  - 대반격 실패 이후 ▲미국과 서방 내 전쟁 피로감 증대와 출구전략 모색 필요성 논의 분출 ▲우크라이나 엘리트 내부 갈등·분열 표면화 등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매우 유리한 입지를 구축
- 러시아의 대미/대서방 관계의 악화·퇴행 상황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군비통제조약을 매개로 한 갈등도 한층 심화
  - 러시아는 서방과 ▲경제제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공중·해상 군사 대치 ▲외교관 맞추방 ▲노드스트림 파괴 ▲자포리자 원전 ▲흑해곡물협정 ▲이-팔 전쟁 등과 관련하여 갈등·대립을 지속
  - 특히 러시아는 ▲New START 이행 중단 발표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CTBT 비준 철회 ▲CFE 탈퇴 등 일련의 핵·재래식 군비통제조약의 악화·무효 조치를 통해 대미/대서방 위협을 고조
- 러시아는 중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개도국 접근을 강화

- 러중은 3월과 10월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 ▲나토의 확대와 인태지역 진출 ▲미국의 인태지역 내 양·다·소다자 안보·경제 협력 심화 등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대응을 시사
- 러중은 대다수 개도국(글로벌 사우스)의 지지 획득을 미국의 국제적 패권의 축소·약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판단하고 BRICS, SCO 등 비서방 다자기구를 활용해 그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
- 러시아는 2023년 9·13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북 밀착·연대 심화
  -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대한 화답 ▲전쟁의 장기화 속 안정적 무기 공급처 확보 ▲역내 비확산체제의 이완·붕괴 가능성 위협 등의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
  - 러시아는 9·13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에서 일종의 공백지대로 여겨지던 군사·안보(표면상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대미/대한 압박을 극대화

## 나. 2024년도 평가

### □ 대내 정세 전망

- 푸틴이 2024년 3월 17일 대선을 통해 장기집권과 전쟁 지속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푸틴은 차기 대선에서 ▲전쟁 중 시행 ▲높은 지지율 ▲대안 부재 ▲非경쟁적 선거 풍토 등으로 인하여 큰 이변 없이 8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로 당선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대선은 푸틴과 정부 노선에 대한 일종의 신임투표이자 통과 의례로서 푸틴과 현 집권세력에 최소 2030년 최장 2036년까지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할 예정
- 다만 러시아 국가·사회의 권위주의화와 군사화 경향의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역량과 발전 잠재력 제고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보통 대선은 정부의 인적·정책적 변화의 기점으로 작용하는데 3.17 대선 이후 푸틴이 반대로 상기 두 측면에서 ‘변화’보다는 권위주의화와 군사회 경향을 ‘지속’할 가능성 다대
-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국가·사회가 ▲경제 성장의 지속 불가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퇴행 ▲과학·기술의 정체와 퇴행 ▲추가 징집 시 저항 분출 등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 대외 정세 전망

- 2024년 평화협상 재개 논의가 지속하여 제기될 것이나 러-우 전쟁의 전선 교착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다대
  - ▲미 대선 캠페인의 본격화와 바이든 정부의 제한적 운신 폭 ▲젤렌스키 정부의 타협·협상에 대한 반감 ▲러시아의 느긋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전황 교착과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임
- ‘러우전쟁’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의 대미/대서방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유럽 안보 정세의 정체·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 2023년 3월 갱신·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대미/대서방 서방 관계에 매우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대외정책의 방향 전환 동기도 취약
  - 2024년에도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지역 현안들을 매개로 미국 및 서방 세계와 대립·갈등을 지속할 것이며 유럽 지역에서 핵·재래식 군비경쟁의 심화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반면 러시아가 근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도 등 개별국과 중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대한 접근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자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대상이자 세력권 형성·강화의 토대인 근외(near abroad: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확대를 위해 진력

- 러시아는 반미/반패권 연대의 핵심 국가들인 중국, 인도, 이란, 북한 등과 양자 차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소위 비서방 개도국과 다자 차원에서 관계 강화를 지속

## 5. 유럽 대내외정세 평가 및 전망

### 가. 2023년도 대내외정세 평가

- 유럽에서 발생한 ‘러우전쟁’과 근린 지역에서 발생한 ‘이팔전쟁’으로 지난 70여 년간 유럽에서 평화를 지탱해 온 다층적 집단안보 거버넌스에 의구심
  - 지금까지 성공적이라 자평해온 유럽의 집단안보체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전쟁을 통해 허점이 부각되었으며 체질 개선 필요성 대두
  - 유럽 각국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이상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능력(capabilities)’ 사이의 간극 확인
  - 또한 절차적으로 회원국들간에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질적인 ‘민주성과 효율성의 딜레마’ 부상
- 유럽에서 변화된 안보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개별국 수준에서 전방위적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수정 중
  - 유럽연합(이하 EU, 2022.3.)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2022.6.) 등 집단적 수준에서 수정된 안보 전략을 발표
  - 2022년 10월 미국이 다수의 전략문서를 발표한 뒤, 프랑스(2022.11.), 네덜란드(2023.4.), 덴마크(2023.5.), 독일(2023.6.) 4개국이 개별국 수준에서 최신 외교·안보 전략서를 잇달아 발표
- 북유럽 2개국(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는 역사상 최초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단일한 군사 동맹으로 결속
  - 이번 북진으로 나토와 서방이 ‘하이 노스’로 연결되고 군사 지형이 변화하면서 나토의 대러 전략에도 변화 불가피

- 스웨덴과 핀란드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으로서 나토 가입을 통해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은 제10차 북극권 총회(10th edition of the Arctic Circle Assembly, 2023.10.20.~21.)에서 북극이 나토의 억지 및 방어 태세에 필수적인 영역임을 확인
- EU는 2022년 ‘전략 나침반 (Strategic Compass)’ 발표 이후 2023년 ‘우주안보방위전략(Space Strategy for Security and Defence)’ 발표를 통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노력 증대
  - EU는 갈릴레오, EGNOS, 코페르니쿠스 등 기존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IRIS와 같은 미래 자산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
  - 이를 위해 EU 전체가 우주 관련 법률과 정책 및 전략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에 초점
  - 아리안 및 베가 로켓 등 유럽 토종 발사체와 유럽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의 개발 촉진을 통해 유럽의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 확보 목표
- EU 각국은 현재 직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지역, 개별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고민이 구체화
  - 브렉시트로 경색되었던 영-프 관계는 유럽의 안보 위기를 맞아 5년 만에 재개된 양국 정상회담(2023.3.10.) 개최를 통해 P5로서 세계 안보 현황 분석을 공유하고 유럽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강화
  - 프랑스는 나토에 회의적 시간을 견지해왔으나 공동의 위기를 맞아 동맹간 상호운용성(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상) 제고 노력
  - 영국은 2021년 통합검토의 수정보(UK 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3.13.) 발표를 통해 다극질서 하 AUKUS(영국-미국-호주), GCAP(영국-이탈리아-일본) 등 탈유럽 안보 협력 가속화
  - 독일은 최초의 국가안보전략(2023.6.14.) 및 중국전략 (2023.7.13.)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제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외교안보정책에 변화를 예고

## 나. 2023년도 대내외정세 전망

- 나토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토는 북극과 가상공간 등 회색지대에서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노력을 AP4 국가들을 포함한 역내외 유사입장국가들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나토는 기존 지리적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북유럽 2국 가입으로 새롭게 편입된 북극, AI와 양자컴퓨팅 기술처럼 지리적 규정과 무관한 영역에서 영향력 확대 시도 중
  - 북방 지역 계획(the new Regional Plan North)을 통해 나토 사령부가 북극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고 북극 작전을 지원하며 일관성 있는 북극 방위 수행의 발판 마련 예정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AP4 국가들과 나토 동맹국간 군사 협력 증대 전망
- EU는 무리한 확장 전략 대신 근린/관여 정책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 온 유럽의 통합·안보전략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군사적 능력 강화 및 나토, 역외 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 전망
  - 군사적 능력 제고를 위해 유럽의회는 나토와 별도로 2009년 제정된 EU 방위조달지침을 바탕으로 역사상 최초로 무기 공동구매를 위해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약 4천3백억원) 투입 결정(23.9.12.)
  - 현재 100% 유럽산에서 65% 이상 유럽산으로 구매 대상 방산업체에 대한 지역적 규정이 완화된 만큼 한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기능성의 불씨가 살아 있음



### III. 정책시사점 및 고려사항

#### □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제도화 및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

- 한미동맹 70주년을 기해 이루어진 네 번에 걸친 대통령의 방미(4月 국민 방문, 8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9月 유엔총회, 11月 APEC)와 정상외교 성과를 내실 있게 제도화
- 양국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명실상부한 경제-기술동맹으로 외연이 글로벌과 우주 영역까지 확대, 이를 각 분야에서 정례화된 협의체로 지속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
- 특히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시 북핵문제, 주한미군 철수여부 등 우리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들에 급격한 정책전환이 예상되므로 민주, 공화 양측 인사와 사전에 접촉하여 사전 조율 필요

#### □ 한국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발효 모니터링 및 개선논의 참여

- 본격적으로 이행 및 발효되는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조율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국익 수호에 진력할 필요
-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미국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서 강조하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안에 대해 양국간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방안 모색

## □ 역내 진영대립의 고착화 차단 및 전략구도의 복합화에 능동적 대응

- 최근 북한은 한미일 대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 고착화를 통해 대북제재 무력화 및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동북아 전략구도의 복합화 리드로 북한의 노림수 무력화에 집중할 필요
- 특히 한일중 협력 구도 창출과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러-북 축(Axis)으로부터 중국을 이격시켜 러북 밀착이 도리어 양국의 역내 고립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 □ 안보정세 불안정의 부정적 파급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 세계적 분쟁과 지역적 불안정, 북한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의 불안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 모색 필요
- 우크라이나 및 중동 문제 등에 의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역량이 분산될 소지 및 美대선 결과에 의해 북핵 문제의 후순화 가능성이 다대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북한의 빈번한 무력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단호한 대응 및 확장억제 등 대북 억제력 강화 요구

## □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에 대한 자생력 강화

- 미중 전략경쟁으로 2024년에도 정치적·경제적 블록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소그룹 중심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필요
- 미중의 전략적 갈등 하에서 우리만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자체 역량 강화와 이슈별 협력 대상 확대가 중요한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를 EU, 호주, 인도, 영국 등으로 더욱 확대·다변화하는 전략 추진

## □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 강화 및 역할과 영향력 확대

-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유엔 중심의 다자관계 중요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등이 주목될 것이란 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 강화 및 역할·영향력 확대 모색 필요
-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유엔 중심의 다자외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나날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의 전략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됨

## □ 한중관계의 원칙적 관리 노력 증대

- 샌프란시스코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 방지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도 중국과의 소통확대, 관계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 필요
-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제반 영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굳이 서둘러서 조급성을 드러낼 필요는 없음
- 아울러 한중관계는 상호존중, 평등호혜 관계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외교적 갈등을 피하고 경제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한국 외교의 가치를 양보하지 않는 원칙 유지가 중요

※ 한중 정상은 2024년 11월 브라질 G20 회의, 2024년 11월 페루 APEC 회의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2025년 한국은 APEC 주최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가능성

## □ 러시아궤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의 명확한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유럽·대서양 안보 환경과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의 연계 및 연동에 따른 동북아 역내 진영화 구도의 고착화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역내 진영화 구도 강화 시 외교·안보 자율성의 제약이 불가피한 한국으로서 ‘신냉전’의 고착화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부담을 심분 활용해 이 같은 경향의 완화를 모색

- 러시아가 북한과 본격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추진할 경우 동북아·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 안보에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한바 러시아의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 발신

**□ 유럽의 전쟁역지력 및 회복탄력성 강화에서 시사점 도출**

- 유럽이 전쟁역지력 혹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인 최신의 군사력(하드파워)과 외교력(소프트파워) 증진 방안의 실효성이 한국 및 동아시아에서 적용 가능한지 검토
- 유럽에서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기존의 집단안보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참고할 필요
- 유럽의 연합적 안보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는 향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 설립 및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방안 구체화 및 내실화**

- 인태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중 경쟁의 최종상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국익의 방향으로 인태전략의 목표와 핵심이익 및 방향과 좌표를 구체화할 필요
- 우리의 인태전략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 중에서 번영을 더 강조하고, 동남아, 인도 등 중점 대상 지역을 선정하며,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원칙 중에서도 포용의 협력원칙을 강조하면서 제3국을 관리해 나갈 필요
- 우리의 인태전략에서 제시하는 ‘9개 중점 추진과제’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인태전략 추진 전담조직’ 신설을 고려하며, 국민들에게 인태전략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지지기반 확충

# 2023년 신안보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I. 생성형 AI 리스크의 부상과 확산, AI 위협의 현실화

## 1. 2023년 평가

### □ 국가전략기술로서 AI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심화

-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이자 핵심·신흥기술로서 AI의 △개발 △수출통제 △보호 △표준 수립 등 주요 쟁점별 미·중 간, 진영 간 경쟁 심화
  -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신흥기술 표준전략(4.27.)」, 「우려국가 투자 제한 행정명령(8.9.)」, 「인공지능에 관한 행정명령(10.30.)」 등 AI 기술의 우위 및 대중 견제를 위해 다각적인 규제 법안 제정
  - 중국 또한 미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음성인식·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 정부의 감시·통제 역량 증진 및 체제 안정화를 시도하는 한편 「중국표준 2035」, 「디지털 일대일로」 등을 통한 자체 표준 수립 중

### □ AI의 진화와 활용 증대에 따른 안보 리스크의 증대

- ‘Chat GPT’ 등 기존 AI보다 뛰어난 산출물을 제공하는 ‘생성형 AI’가 부상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위협 발생 가능성 제기
  - ※ 생성형 AI는 기존 콘텐츠를 활용,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AI 기술
  - 기능적·활용적 진화가 두드러진 생성형 AI의 특성상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를 악용한 치명적 공격과 예상치 못한 안보화 리스크에 직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
  - 생성형 AI는 △편향성과 환각의 한계점 문제 △악의적 시도에 따른 거짓·유해 정보 제공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상존, 이에 국가안보적 우려에 따른 생성형 AI의 통제 필요성 논의 촉발

## □ AI 통제 및 책무성에 대한 국제 규제 · 규범 논의의 활성화

-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1차 REAIM 고위급 회의’ 개최(2.15.~16., 네덜란드 헤이그)
  - ※ REAIM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로 80여개국 대표단 참석
  - 핵심주체인 軍뿐만 아니라 민 · 관 · 학 · 국제기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해관계자 역시 AI 도입 · 활용에 대한 폭넓은 책무성을 부과, 적절한 안전장치와 인간의 감독 보장 중요성을 재차 강조
  - ‘군사적 AI 활용의 책무성’ 관련, 국제사회 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소통을 최초 공론화가 의의에 해당하나 △AI의 활용을 ‘자율시스템’ 측면에 국한한 논의 전개 등 적용 범위의 구체성 부재가 지적
    - ※ AI 기술 성숙도 및 발전 단계에 따른 합의 · 갈등의 차이가 배경
- 세계적으로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신속 · 적합한 규제 조치에 대한 합의 모색 및 구축을 위한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11.1.~2., 영국 블레츨리)
  - 28개 참여국과 빅테크 기업은 △AI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위험성 경고 △인류와 AI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 확인 및 △인간 중심적 △신뢰가능한 △책임감 있는 AI 기술 보장을 위한 협력 합의
  - 동 회의상 △AI의 국제 표준과 감시방안 확립 수준 논의까지 전개되지 못한 점 △AI의 관리 · 통제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국가 간, 정부-기업 간 입장차 존재라는 점이 실효적 효과의 기대가 어려운 상황



##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 □ 2024년 AI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국으로서 실천 의제 발굴·모색 시급

- 한국은 2024년 상반기 'REAIM 2024'와 제2차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 AI 규제·규범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개최 예정 AI 국제회의 관련 △AI 규범 선도국과 후발국 △AI 활용 역량에 따른 기술격차 등 AI의 책무성 적용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 문제라는 어려운 과제가 부여
- AI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AI의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UN 산하 AI 전담 국제기구 신설 논의 필요성 강화 필요
  - AI 기술의 발전 수준과 범용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안전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세분화해서 전개하되, 당면한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급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필요

#### [발굴 가능 의제의 예시]

- 사이버공격수단·대량살상무기 제어 악용 소지가 큰 AI 대상 안정성 평가 도입
- AI 개발 시 사전 취약점 발굴을 위한 레드팀 구성 의무화
- 생성형 AI의 산출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 AI 학습 창작물과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인간-기계와의 검증·협업 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 사례 공유 등

### □ AI 위협 증가에 따른 다양한 대응수단의 확보 논의 본격화 전망

-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수단의 고도화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경감 수단의 확보가 시급할 전망
  - △지능형 영향력 공작 대응센터 △자체 생성형 AI플랫폼을 통한 잠재 허위 정보위험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력 보호용 다중신호변환 프로그램 개발 등 진화된 정보심리전의 위협특성을 고려한 능동적 대응 인프라 마련

- 향후 중국·러시아·북한의 복합적 대남 정보심리전을 고려한 다층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한국의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안 대상 ‘한-미-일-NATO’ 사이버안보 공조 연대·공동 시나리오 훈련 등 긴밀한 공조와 대응력 강화
- △위험경감 △측정원칙 △책무성 △투명성 관련 생성형 AI 활용 전반의 실행 가치를 고려한 보편적 적용 원칙 마련도 시급
- 한·미 정보자원 우위를 위한 전략적 기반 논의를 확장하는 한편, 민간 및 비정부 행위자들과의 연구 기반·정보협력 확대가 필요

## II. 사이버공간의 진영화와 협력 기반 사이버안보 강화

### 1. 2023년 평가

#### □ 서구권 국가의 「사이버안보전략」, 민간협력·진영 내부 협력 강조

- 미국과 서방에서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여 민간협력과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진영 내부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사이버공간의 운영을 강조
  - (미국) 3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동맹국과 파트너 국가간 전례없는 협력 강조
  - (미국) 9월 국방부의 「2023년 사이버전략 요약판」은 통합 역지력 차원의 △사이버역량 극대화 △국력의 他수단과 협조, 사이버작전 수행방법 설명
  - (호주) 11월 「2023~2030 호주 사이버안보전략」 발표, △사이버안보의 세계적 리더 부상을 위한 로드맵 제시 △사이버위험관리 강화방안 제시

#### □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 노력

- 국가 주도로 사이버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민간 기업의 사이버안보 관련 의무와 역할 수행 담당 거버넌스 구조 정립
  - 美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美 증시 상장기업 대상 중대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공개 △사이버 위험관리 전략·거버넌스 관련 중요 정보 연례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 발표(7.26.)
  - 美 국가사이버국장(ONCD)과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시스템 생태계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부문 대표자 중심 포럼 개최(3.28.)

## □ 신기술 연계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접근법 제시

- 주요국은 △양자암호 △AI △딥페이크 이용 허위정보 등 신기술 접목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접근법 제시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양자컴퓨터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내성이 있는 암호화 표준초안 공개 △비영리 연구기관인 MITRE는 「AI 보안을 위한 규제틀」 발표 및 AI 안전성 확보 접근법 제시
    - ※ 美 NSA·FBI·CISA, 「딥페이크 위험·기술·사용 경향 보고서」 발표(9.12.)
  - △(WEF) 안전한 양자컴퓨팅 시대 구축을 위한 「양자대비툴킷」 발표(6.29.) △(ENISA) 「AI 사이버보안 기준 평가보고서」 발표(4.27.) △(싱가포르) 책임있는 AI이용 평가틀 개발을 위한 ‘AI 검증재단’ 설립(6.7.)

## □ 사이버공간의 진영화에 따른 공세적 사이버안보 대책 전개

- (ENISA) 「공급망 사이버보안 대책 모범사례집」 발표 △기업의 전략적 접근 △공급망 위험관리 △공급자 관계 관리 △취약성 대응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대상 품질 검증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6.13.)하는 한편,
- 사이버공간의 진영화 가속에 따라 미국과 서구권은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안보 대책을 전개
  - 美 CISA·FBI는 英·佛·獨·濠·加·뉴질랜드 등 보안기관 공동 「사이버보안 위협의 균형 전환: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원칙과 접근 지침」 발표(4.12.), 기술적 권장사항 외 제품 개발·구성·출하 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준수 원칙 설명
  - 美 사이버국가임무군(CNMF)은 헌트 포워드(Hunt Forward) 부대의 알바니아 파견 발표(3.23.), CNMF는 동맹국 대상 동 부대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소 22개국에서 44회 이상 작전 수행을 추정
    - ※ 헌트 포워드는 공격자의 침입 예상, 능동적인 네트워크 탐색 및 특정된 위협 제거 활동

##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 □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 정비 및 거버넌스 구조 강화 예상

- 주요국은 사이버위협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영국에서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제품 보안 및 통신법(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Act)」이 발효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제품 등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

### □ 국제질서 불안정성이 촉발하는 사이버공격의 지속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 배후 해커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물론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사이버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분쟁의 전 세계 확산은 군사적 작전의 실행과 더불어 사이버 전쟁 또는 사이버 작전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전개 전망
-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2024년 예정된 주요 정치적 이벤트 시 자유민주적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 왜곡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영향력 공작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

### □ 북한발 사이버위협 및 신기술 활용 사이버공격 증대 전망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 등 우주 개발과 우주 군사화 경쟁 확대에 따라 우주 사이버위협의 증대 전망,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의 공급망을 통해 우주 자산과 인프라가 사이버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증대
-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타개 △핵개발 자금 지원 목적의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랜섬웨어 범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북한의 해킹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피싱 공격·딥페이크·탐지 회피 자동화 멀웨어 등 신종공격기법 확산  
△생성형 AI에 의한 사이버공격·방어의 증대 △생성형 AI 이용 차세대  
피싱 공격 △IoT 사이버공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증대 전망

#### □ 진영 내 공조 기반 공세적 사이버활동과 영향력 공작 대응 필요

- 우리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함을 물론 11월 22일 영국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진영 내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
- 기존 우리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이버공간 대상 방어적 전략에 기울어진 측면이 있었던 바, 한미 사이버동맹에 기초하여 공세적 사이버활동 (Offensive Cyber Operation) 강화 필요
  - △미국과 서방 등 주요국과 공조에 기초, 악의적 사이버행위를 수행하는 적대국 대상 경보 발령 △비난 성명과 책임귀속 활동의 적극적 전개 △선 제적 방어·힌트 포워드 포함 공세적 사이버활동의 적극적 수행 고려
- 외국 기인 영향력 공작의 적극 대응을 통해 우리 정부 및 정치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 왜곡 방지
  -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중심의 팩트체크 및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 필요 △SNS 기업 협력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폐쇄 또는 차단 등 적극적 대응 모색 및 입법적 대응책 강화 필요
-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 공조에 기초하여 북한의 외화획득과 신기술 탈취 목적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 필요, 정보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간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해커·사이버범죄집단 대상 힌트 포워드 작전 수행 고려

### Ⅲ. 기후재난 지속 속 대응과 회복력 강화 부심

#### 1. 2023년 평가

##### □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의 중첩으로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발생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32°C 높아 역사상 ‘가장 더운 12개월’로 기록 (WMO,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 12.9. 보고서 등)<sup>1)</sup>
  - 기록적 수준의 지구 기온 상승은 △기름·산불(동아시아·호주·아프리카 남부·중앙아프리카) △홍수(남미·美남부) △기온상승·건조(캐나다·美북부) 등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 규모와 범위 확대

##### □ 국제사회 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 노력과 이행 과제

- (기후위기대응) 책임과 보상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기후 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8)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기금’ 공식 출범 및 기후펀드 설립 등 의미 있는 진전<sup>2)</sup>
  - (기후피해기금) COP28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 인정 및 기금지원을 합의, △UAE·독일(1억 달러) 등 19개국 약 8억 달러 지원 약속<sup>3)</sup>

1) Climate Central, Earth's hottest 12-month streak, November 9, 2023, <https://www.climatecentral.org/climate-matters/earths-hottest-12-month-streak-2023> (Accessed: December 4, 2023).  
2) UN Climate Change, COP28 The UAE Consensus, pp. 8-10 (Accessed: December 14, 2023).  
3) Ibid., p. 9.

- (기후 펀드) UAE 기후금융격차해소를 위해 300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의 ‘기후 펀드(ALTERRA)’ 조성 계획을 발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2천500억 달러의 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설정<sup>4)</sup>
- (탈탄소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대하는 협약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117개국이 동참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박차<sup>5)</sup>
-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 및 COP28 총회에서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당사국 간 이견 노정
  - UNFCCC의 9월 보고서는 협약 당사국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5℃ 제한’ 목표 달성에 역부족이라고 평가, COP28 총회에서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차<sup>6)</sup>
  - COP28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1.5℃ 제한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석연료 감축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국 등의 반대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아닌 ‘10년 이내 전환’에 합의<sup>7)</sup>

##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 □ 기후재난 악화불구, 국제정세불안은 기후협력 장애요인으로 작용 예상

- (실존적 위협)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두 개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

4) Ibid., p. 12.

5) Ibid., pp. 8-12.

6)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26100530?site=mapping\\_related](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26100530?site=mapping_related)

7) UN Climate Change, COP28 The UAE Consensus (accessed: December 14, 2023).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Global Risks 2023」 보고서는 기후 및 환경 문제를 향후 10년간 인류의 생존 및 경제를 위협할 주요위험요소로 제시<sup>8)</sup>(1.11.)

※ 단기 위험요인으로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2위) △지정학적 대립(3위) △기후변화 완화실패(4위) 지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미·러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공동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 약화 우려 배경

## □ 기후 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탈탄소 전환 노력 지속

- (기후 위기 완화와 적응 노력) 지정학적 갈등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기후 위기 완화와 적응, 회복력을 위한 공동 협력도 지속할 전망
  - (기후 재정) 기후손실·피해기금 및 기후펀드 등 ‘기후재정’ 확대로 개도국의 기후위기피해와 기후변화적응지원 본격화 전망에도, 기금공여 주체와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우려
  - (탈탄소 비즈니스 접근) 「케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제안한 탈탄소 최대 방안으로 ‘탄소값’ 인상 및 온실가스 배출·삭감·흡수량을 가치화해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는 비즈니스 접근 가시화 전망<sup>9)</sup>

8) WEF, *Global Risks Report 2023*, January 2023, [https://www3.weforum.org/docs/WEF\\_Global\\_Risks\\_Report\\_2023.pdf](https://www3.weforum.org/docs/WEF_Global_Risks_Report_2023.pdf)

9) Simon Black, Florence Jaumotte, Prasad Ananthkrishnan, World Needs More Policy Ambition, Private Funds, and Innovation to Meet Climate Goals, IMF blog, November 27, 2023,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27/world-needs-more-policy-ambition-private-funds-and-innovation-to-meet-climate-goals> (accessed: December 4, 2023).; Sam Meredith, IMF chief makes the case for carbon pricing as ‘writing on the wall’ for oil and gas, CNBC, December 3, 2023, <https://www.cnbc.com/2023/12/03/imf-chief-makes-the-case-for-carbon-pricing-at-cop28-climate-talks.html> (accessed: December 4, 2023).

- (다자협력) BRICS 산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처음으로 기후 위기대응회의 주관, 방글라데시 기후위기 대처지원을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 설립 예정

#### □ 이상기후 뉴노멀 대비, 국제협력·민관협력 강화 필요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기술 투자 확대 등 과학 기반 탈탄소화 전략 및 물리적 전환·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지속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정상회의’, ‘인태도서국정상회의(FIPIC)’ 등 국제협력 강화 및 기후 재정에 기여 노력
  - 태평양 도서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 역량 부족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인프라 개발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확대 및 협력 강화
- 글로벌·국가 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미래 위협 식별, 정보교환 등 감시·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핵심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 개발 등 민관 공동 대응 강화
  - 美 국방부의 ‘기후평가도구(DCAT)’ 공유 등을 통해 한미 작전능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력 향상

#### □ EU 탄소국경세 본격화 대비 필요

- EU의 탄소국경세(CBAM) 본격화 대비 동향 파악 및 對EU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RE100 △ESG 경영 등 저탄소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철강, 자동차 등 국내 관련 산업 리스크 관리 필요
- 탄소 비즈니스적 접근 대비 탈탄소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점진적 확대 △‘무탄소에너지’(CFE) 의제 강조 △저탄소 시대 수요 급증 예상 광물·에너지원의 비상수급계획 수립·점검과 자원 공급망 다각화 강화

## IV. 적극적 우주력 강화에 따른 우주 공간 대상 경쟁 심화

### 1. 2023년 평가

#### □ 우주 선진국의 우주 공간 대상 핵심 인프라 적극 투자 기초

- 美·中·日·EU 등 우주 선진국은 우주 공간을 국가안보 및 미래경제로 간주하여 핵심 인프라에 적극적 투자
  - △지상 영상 △방송통신 △인터넷 △위치 서비스 등이 필수 사회운영 요소로 자리하며 위성 자산의 중요성 부각
  - 우주군을 운영 중인 미국과 중국 외에도 여타 국가도 우주를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우주 영역을 둘러싼 다차원적 경쟁 본격화 추세
- (미국) 민간부문 중심 우주산업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동 모델 기반 민간 참여 촉진
  - 우주의 상업화 지침 수립 △연구개발 투자 △기술·노하우 이전 △정부 조달 등 진행
  -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통신과 전파, 우주쓰레기 문제 등을 전담하는 ‘우주국(Space Bureau)’ 신설 결정, 위성 산업에 적극 대응 시사
- (일본) 「우주기본계획」(2020) 기반 우주 정책 추진에 이어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각료회의에서 채택·공표(2022.12.) 하며,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우주 안보 강화 발표
  - 올해 4월 내각부는 「우주기본계획(案)」 공표에 이어 「우주기본계획」 발표(2023.8.) 및 「우주기술전략에 관한 관점(위성)(案)」 공개 (2023.9.), 독립적 우주 이용 대국을 목표로 우주 기반 강화 추진

- 「美·日 우주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美·일간 우주협력 기본사항을 합의 했으며(2023.1.), 양국 기관(JAXA, NASA 등)의 우주 활동(MMX: Martian Moon Exploration) 등에 공동활동 추진
- (중국) 당대회(2022.12.)에서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과 신형 공업화를 위한 강국 건설 중 우주 영역 포함’
  - 민군 융합 접근 방식의 우주 산업 적극적 육성, 중앙·지방 정부가 리스크 머니 공급 체계
  - 우주 강국 건설을 목표로 △우주정거장 △유인 우주선 △우주 발사 횟수 등 신기록 달성 및 우주 진입 능력 지속 제고 중이며, 위성항법 및 위치 서비스 생산총액도 4,700억 위안 달성(2022)
    - ※ 궤도운행 위성 수 600개 이상, 창정시리즈 로켓발사 50회 초과발사 성공률 100%) 달성
  - 2023년 △50회 우주발사 임무 배치 △우주정거장의 응용·발전 단계 진입 △달탐사공정 4단계 및 행성탐사공정 추진 △민영 로켓 발사 △중복 사용 가능한 「쌍곡선(双曲线)」 2호 로켓 수직 이착륙 시험 성공
- (EU) 「안보와 국방을 위한 유럽 우주 전략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며 우주 공간의 전략적 이익 수호 추진
  - 우주 기술 발전·우주 인프라 공격능력 확보대응 필요 인식, △우주 내 전략적 이익 수호 △적대적 행위 억제가능한 우주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 □ 우주 경제의 성장 가능성 예상에 따른 적극적 우주력 강화 예상

- 美·中·日·EU 등 우주 선진국은 수립한 우주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우주 개발 가속화로 우주 공간의 안보화 심화 가능성 다대

- (미국) ‘통합역제’와 중국의 A2/AD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다영역작전 수행을 위한 우주력 강화 지속 및 상업화를 통한 리더십 추진
- (일본) 2023년 「우주 개발 계획」을 발판으로 우주 개발을 체계화하는 한편, 美日 동맹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우주 협력 추진 예상
- (중국) 성과 중심 그리고 민군 융합 방식의 우주 개발을 지속하고, 新다영역정밀작전개념에 기반한 우주력 강화 가속화 예상
- (EU) 우주 기술 주권과 복원력 강화 목적 ‘단일정보분석역량(SIAC)’ 확보 및 회원국의 우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이해 증진과 우주 분야 파트너십 추진

#### □ 우주 선진국간, 우주 선발국-후발국간 정치·경제·안보 경쟁 심화 전망

- 현재 美·中은 우주 개발 방식에도 이견 △(美) 시장 중심의 우주 개발 △(中) 정부 주도 목표지향적 우주 개발 진행, 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양국간 우주 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 예상
  - 우주 공간 대상 공통규범의 부재 상황에서 뉴 스페이스의 등장은 새로운 행위자와 이슈 야기 우려, 동 갈등은 국가적 갈등과 충돌로 연계 가능성 다대
  -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심화 예상, 역내 우주 국가들의 경쟁 심화는 우주 개발을 위한 핵심 자원 공급망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우주 공간의 복합 경쟁 심화 예상, 한국의 미래 로드맵 구체화 필요

- 우주 공간의 복합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한국의 미래 우주 안보 및 경제 로드맵 구체화 필요
  - 자본력을 갖춘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로 글로벌 우주산업이 고속 성장함에 따라 한국형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및 투자 필요

- △저궤도 대형위성·정지궤도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을 위해 한층 고도화·대형화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체계화 및 추진
- 우주 협력 대상국 확대, 위성 자산 활용 공공 서비스 개발 및 ‘한국형스타링크’ 서비스 추진으로 新우주 산업 시장 개척 모색
- 북한의 우주 개발은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억제력 확보에 두고 있어 한국 및 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
  - 2023년 3차 발사 직후 북한은 추가 정찰위성 발사를 밝힌 만큼 향후 군사위성능력의 고도화 및 개발 가속화 예상
  - 우리는 북한의 對우주 자산 위협 억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대응력 개발과 우주 위협 대응을 위한 우주 상황인식 및 위성요격 미사일(Anti Satellite Weapon, ASAT) 위협 대응 강화 노력 필요
- 한미 및 한미일의 우주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진
  - 한미 정상회담·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주 분야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및 책임 있는 우주 이용과 관련된 우주 안보 협력을 약속한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
  - 미국과는 미일 우주 협력 사례를 고려, 양국의 우주 개발 협력 지속 및 공동 협력 시 △세금·수수료 감면 △지적 재산권 등 혜택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도하며, 한미일 3자 협력으로 확대 모색

## V. 테러 외연의 확장과 증동發 테러위협 의 확산 가능

### 1. 2023년 평가

#### □ 흉기난동사건 계기 개인적 불만 기반 ‘외로운 늑대형’ 국내테러위협 가시화

○ ‘외로운 늑대形’ 연쇄흉기난동사건 이후 동 사건을 모방한 협박사건이 전국적으로 대거 발생, 개인적·사회적·정치적 불만이 테러 동기로 작용하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위협 가능성이 국내에서도 부상

- 주요국의 대테러활동 강화에 따른 국제테러단체의 대형기획테러가 어려워지자 개인 추종자 중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빈발, 코로나 19 이후 개인적·사회적·정치적 불만도 테러동기로 작용 등 이념적 다양화 양상
- 2023.12. 기준 국내에서 적발되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상 테러협박 사건은 종교적 극단주의 이념 외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연계양상, 테러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 중임을 시사

####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 준동

○ 이스라엘-하마스(10.7.) 전쟁의 예상 외 장기화에 따라 양측간 영향력 공작 및 허위정보·오정보 이용 다양한 프로파간다 유포 중, 反유대주의·反이스라엘 및 反서구를 내세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 준동

- (프랑스) 지난 10월·11월에 이어 외로운 늑대형 이슬람 극단주의 흉기테러 발생(12.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팔 전쟁’) 격화에 따라 ‘가자지구의 참극을 규탄’하는 유사한 성격의 테러 발생 우려

- (독일) ISIS 추종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유대회당·크리스마스마켓 대상 트럭 테러 모의 적발 등 이-팔 전쟁 장기화에 따른 反유대주의·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 증가 추세
- (미국) FBI 및 DHS는 이-팔 전쟁의 여파로 미국 내 자생테러 및 외로운 늑대형 범죄 확산 우려 및 「레이」 FBI 국장은 상원청문회를 통해 美 본토를 노린 테러위협이 ‘새로운 차원’으로 고조되었다고 증언(12.5.)<sup>10)</sup>
- (필리핀) 분리주의 무장단체 활동 및 ISIS 연계조직이 활동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가톨릭 예배 중 IS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 발생, ‘이-팔 전쟁’의 동남아시아 내 테러위협 파급 가능성 우려
- 이-팔 전쟁 이후 발생한 외로운 늑대 테러는 대부분 인터넷·소셜미디어상 ISIS 충성 맹세 및 ISIS 관련 프로파간다를 유포했던 것으로 파악, 이-팔 전쟁을 계기로 ISIS의 재준동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

#### □ 정쟁 불안 지속에 따른 중동·아프리카의 테러 발생 악화

- 중동·아프리카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분산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의 해외 대테러작전 축소 여파로 역내 테러발생이 지속 악화 추세, 정쟁 불안은 테러발생 가중 배경
- 테러단체 및 무장반군단체 대상 군사적 작전이 대폭 약화된 가운데 쿠데타 등 정쟁 불안의 지속은 테러발생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위협 요소로 작용, 추가적인 피해 우려
- 코로나 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국경봉쇄·이동제한 등 조치가 대부분 완화되면서 외국인 테러전투원·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의 이동 가능성 제기, 중동·아프리카發 테러발생의 전 세계적 차원 확대가 우려

---

10) Ken Dilanian & Summer Concepcion, “FBI Director Wray Calls for Renewal of Key Surveillance Tool”, *NBC News*, December 5, 2023. (Accessed: December 6, 2023).



##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 □ 국내외 외로운 늑대 테러위협 증가 대비 대테러 활동 및 관련 법제 정비

- 외로운 늑대형 테러위협은 개인의 정신건강문제와 대부분 관련, 잠재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회안전과 관련되는 정신건강적 요소를 식별 및 대테러 활동에 반영하는 방안 수립 필요
  - EU는 기분장애(우울증), 망상장애, 조현병 등 정신건강적 요소를 대테러 활동에 반영한 실무자 대상 가이드라인<sup>11)</sup>을 개발 및 배포, 美 DHS는 FUSION Center 기반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지원 중
- 국내 연쇄 흉기난동 당시 「테러방지법」 적용 여부 검토 논란, 변화하는 테러양상 및 테러의 외연 확대를 반영하는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제2조) 규정 개정 필요
- 총기 소지가 어려운 국내 환경상 외로운 늑대 테러위협은 사제 총기, 불법개조총기 및 모형실탄 개조 및 이용하여 발생 가능성 상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모형총기·실탄 관련 제재 강화 필요
- 외로운 늑대 테러위협은 인터넷·소셜미디어상 활동·유대감이 강하고, 테러 콘텐츠를 적극 유포한다는 점을 감안,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제12조) 관련 긴급삭제 요청권 요건 완화 필요
  - ※ 現 긴급삭제요청 후 방송통신심의회 토의를 거쳐 결정 시 평균 10일 소요 예상

### □ ‘이-팔 전쟁’의 여파로 인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준동 가능성에 주목

- 무슬림 2세대·3세대 중심 이주민 커뮤니티가 자국 내 형성된 서구 주요 국은 하마스 동조 및 이스라엘 규탄을 내세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점차 발생 중,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 1세대 중심 무슬림 커뮤니티 형성 중임이 차이

---

11) Zainab al-Attar, “Extremism, Radicalisation & Mental Health: Handbook for Practitioners”, *Handbook RAN H&SC*, November, 2019.

- 무슬림 1.5세대 및 2세대의 우리 사회 본격 진입 전까지 상대적으로 자생 테러위협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본국 연계 또는 ‘이슬람’ 관련 이슈의 파급력 △국내 단체 연계 등에 주목 필요

□ 「하마스」의 수법을 모방한 북한의 대남 후방테러 대비 필요

-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수법을 모방한 북한의 대남 후방테러 가능성 존재, △북합테러 △하이브리드방식 테러를 중점에 둔 예상 시나리오 개발 및 대비 필요
- 2024년은 총선 및 주요 국제회의 등 대테러 안전활동이 필요한 행사 다수, 총선을 겨냥한 영향력 공작 등 프로파간다 유포 외 물리적 무력·비물리적 무력·사이버공격 등을 조합한 대남 후방테러도 가능

## VI. 사이버범죄의 급증과 국제마약시장의 지속 팽창

### 1. 2023년 평가

#### □ 전세계 마약시장의 팽창 추세 및 주요 유통경로·행위자의 다각화 경향

- 전 세계 마약류 남용자 연속 증가와 함께 청년층 중심 마약류 남용 지속 증가 추세, 특히 청년층의 향정신성 물질 남용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합성마약류 시장 성장에 주목 필요

※ 전 세계 인구 17명당 1명꼴 마약류 남용, 2011년 대비 23% 증가(UNODC, 2023)

- 합성마약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은 국제마약조직의 유인 요소로 작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신규 합성마약시장은 사실상 지리적 제약이 없으며 마약 생산조직 대비 유통조직의 폭발적 성장 유도
- 전통적 메스암페타민 시장인 동남아시아·동아시아·북미의 안정 추세와 함께 서남아·근동·중동·동남아프리카·서아프리카 등지로 메스암페타민 시장이 기록적인 성장<sup>12)</sup>, 특히 아프간 내 메스암페타민 제조 증가에 주목 필요
- 코카인 수요 및 공급이 급증하면서 국제코카인시장도 팽창 추세, 시장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밀매조직이 코카인 시장에 참여하면서 각 조직간 △경쟁 △전문화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sup>13)</sup>

12)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Contemporary Issues on Drugs”, *World Drug Report 2023*, June, 2023.

13) Ibid.

- 대면 거래보다 소셜미디어 및 다크웹을 통한 거래가 10년 연속 성장, 국내의 경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마약거래조직의 구조 또한 점조직화 형태로 변모

## □ 비대면의 일상화를 노린 해킹·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범죄 급증

-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美·英·加·濠 등 주요국에서 로맨스 스캠과 몸캠 피싱이 급증했던 추세가 지속, 특히 기존의 송금 유도 방식에서 특정 대상·항목 투자 권유로 전환되는 등 로맨스 스캠 범죄수법의 진화 양상
  - 국내 발생 로맨스 스캠범죄 조직은 주로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라이베리아 등)와 동남아 출신이 해당, 국내 발생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변화 및 내국인 대상 범죄피해의 확장 가능성 제기
    - ※ 기존 외국인 범죄의 특성은 동일 국적 또는 동일 종교 커뮤니티 대상 주로 발생
- 전통적 유형인 해킹 및 가상자산 탈취형 사이버범죄도 꾸준히 증가 양상, 대북제재 지속 상황 아래 통치자금 및 미사일 자금 확보 목적의 북한 배후 사이버범죄 대상이 전 세계로 확대 및 피해 급증 추세
  - 과거 한국 등 동아시아 중심이었던 북한의 사이버범죄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가상자산 탈취 피해금액도 미화 17억 달러 상당, 범죄피해대상 역시 일반 민간인까지 확대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 발생
  - 북한이 절취한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한 중국 등지에서 주로 적발, 마약·위조지폐 유통에 이어 중국이 북한연계 국제범죄의 주요 매개자 역할 담당 확인

## 2. 2024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 □ 국제마약시장의 팽창에 따른 국내마약시장의 동향 주목 필요

- 코카인 및 합성마약 등 국제마약시장은 기존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신규 시장 형성을 통해 빠르게 확산 추세,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케타민 등 합성마약류시장의 성장에 주목 필요
  -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産 메스암페타민류 가격 저하가 유통 확산에도 기여한데다 코로나 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국내외 여행객 증가는 마약류 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 메스암페타민·케타민류 시장 중심이라는 국내 마약시장의 특성상 동남아 현지 클럽 등에서 유행하는 케타민류 신종합성마약은 국내유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 다양한 화학구조로 제조되는 신종합성마약의 특성상 국과수 검출이 100% 불가능한 점을 고려, △신종합성마약 표준품 확보 △머신러닝 기반 신종마약 화학구조 파악 △현지 유통약물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추가적으로 국내 마약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유도가 필요하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시 마약거래내역 등 수사에 필수적인 단서·증거 관련 협조 강제방안 마련 필요

### □ 사이버범죄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 및 기소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형사사법기관간 국제협력의 신속화 및 범죄조직 관련 정보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유관기관 협력으로 확대 필요
  - 동남아 등지로 도주 또는 동남아 기반 범죄조직의 경우 현지 형사 사법기관과 협력이 필수적이거나 동남아의 지리적 특성상 1개 국가의 협조만으로는 불완전, 「인터폴」 외 「아세안폴」과 적극 협력 긴요

- 신속한 국제협력을 위해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이 선행되는 바, 현재 가입 검토 중인 「부다페스트협약」의 가입 및 국내 비준 절차의 신속 처리와 함께 협약 초안이 발표된 「UN사이버범죄협약」 관련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다만 「UN사이버범죄협약」은 신속한 국제협력 강화 목적보다 러시아·중국 등 진영화 성격이 강한 협약임을 감안, 해킹 및 가상자산탈취 등 북한 연계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 반영 목적
- 북한 연계 국제범죄 발생양상이 마약밀매 및 위조화폐 제작에서 해킹 및 가상자산탈취로 전환 양상, 동맹에 기반한 국가배후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
  - ※ 현재 美 재무부 지정 ‘국가 배후/연계 범죄’ 관련 제재 및 접근법도 참고 필요

## INSS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인쇄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한석희

주 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 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처 한국학술정보(주)

ISBN 979-11-6983-861-0 (93060)

**INSS**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 02-6191-1111 [www.inss.re.kr](http://www.inss.re.kr)

비매품/무료

93060



9 791169 838610

ISBN 979-11-6983-861-0